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10 2021
Vol. 58



Environment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October, 2021

VOL. 58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273-05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 02-6908-8568

제작

(주)케이에스센세이션 | 02-761-0031



04

재정 INSIGHT

04

KPFIS 인사이트

OECD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현황 비교 및
시사점

나원희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12

재정칼럼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탄소중립 추진과 재정정책 방향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



20

재정 NOW

- 20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26 숫자로 보는 나라재산
- 30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수입
- 36 키워드 재정
 미사일
- 40 해외재정동향
 2021년 9월 OECD 중간경제전망



48

재정 STORY

- 48 정부재정통계변천사
 1990년대 작은 정부론: 민주화와 외환위기
- 54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창조적 파괴’를 실천한 길거리 화가뱅크시
- 58 경제철학 이야기
 오스트리아 학파의 창시자, 칼 멩거
- 62 발행인 레터
- 64 재정 캘린더
- 66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 71 애독자 코너



OECD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현황 비교 및 시사점

나원희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nwh2019@kpf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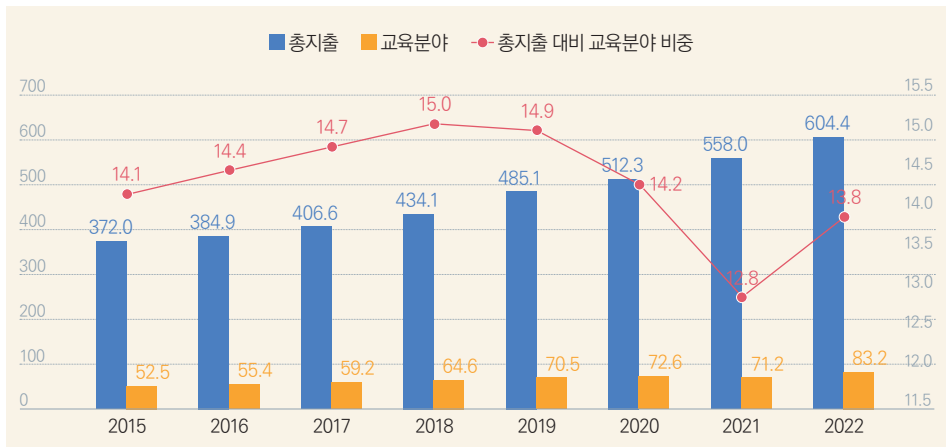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교육계가 뜨겁다. 이 진단은 일반재정(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로 2021년에는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한 총 285개교가 참여하였고, 그중 성신여대·인하대 등 수도권 사립대와 국립대인 군산대 등 52곳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나머지 233개교는 3년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기존의 ACE+(대학자율역량강화), CK(대학 특성화), 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CORE(대학인문역량강화), WE-UP(여성공학인재양성)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한 것으로 재정확충을 통한 대학의 기본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 매년 정부는 대학에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여건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의 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부족하다면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현주소

정부의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015년 52.5조원에서 2022년 83.2조원으로 증가 추세이며, 총지출 대비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14.1%에서 2022년 13.8%로 12~15% 사이의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2021년도에 교육분야 지출 금액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자동 감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경우, 4.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후 2022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분야 지출 비중

(단위: 조원, %)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21). 「2021 주요 재정통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 「2022년 예산안 주요 내용」

2022년도 교육분야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 83조 1,693억원 중 유아·초중등교육이 84.1%로 교육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은 각 14.1%, 1.4%이다.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영역 역시 유아·초중등교육인데, 전년도 58조 6,375억원에서 11조 1,974억원 증가한 69조 8,349억원이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20.79%로 연동됨에 따른 증액이다.

반면 고등교육 영역은 전년 대비 6,680억원 증액되어 11조 9,950억원이며, 증액의 대부분이 맞춤형 국가장학금(39,946→46,567억원, 6,621억원 증액)에 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도 고등교육에 해당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이 2021년 3,660억원에서 2022년 3,880억원으로 약 220억원 증액되었다. 유아·초중등교육과 비교하여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의 예산 증액분이 매우 적고, 특히 고등교육의 경우 대학기관이나 사업단위의 증액이 아닌,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생지원임을 감안할 때, 실제 정부가 대학(기관) 지원을 위해 증액한 지원금은 약 1,329억원(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330억원, 대학혁신지원 +999억원)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 2022년도 교육분야 예산안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안	비고
유아·초등교육	586,375	698,34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532,300→643,008)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943→6,075) •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39,168→35,897)
고등교육	113,270	119,950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1,710→2,040) • 맞춤형 국가장학금(39,946→46,567) • 대학혁신지원(6,951→7,950)
평생·직업교육	11,052	12,000	• 전문대학 혁신지원(3,660→3,880) • 평생교육바우처지원(74→141)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1,669→1,725)
합계 (교부금 제외 시)	712,026 (179,776)	831,693 (188,686)	16.8% 증가 (5.0% 증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 「2022년 예산안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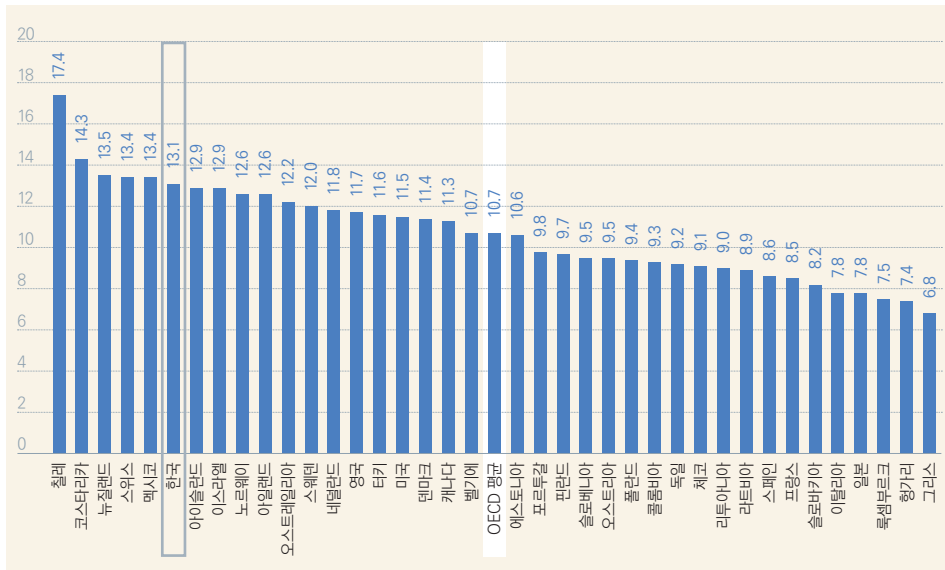
교육재정의 국제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정부의 교육분야 투자가 적정수준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OECD 국가들과의 국제비교를 실시했다. OECD 국가 평균적으로 정부지출 대비 전체 교육(초등~고등교육)에 대한 지출 비율은 약 11%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13.1%로 칠레, 코스타리카, 뉴질랜드, 스위스, 멕시코 다음으로 6번째로 높았다. OECD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정부지출 중 교육분야에 지출하는 비율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 사항이 더 고려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전체 교육분야 영역에 골고루 투자되고 있는가? 특히,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 수준은 어떠한가이며, 둘째는 등록학생 수를 고려한 학생 한 명에게 적절한 교육이 투자되고 있는가다.



〈그림 2〉 OECD 국가 정부지출 대비 공교육비(초등~고등교육) 비율(2018년)

(단위: %)



자료: OECD. (2021). 「Education at a Glance 2021」

●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율

먼저, OECD 국가 간 비교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비율은 <표 2>와 같다. 앞서 제시한 교육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비율(그림 2)이 높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 비율도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3% 이상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칠레(5.4%)와 스위스(4.0%)는 4.0% 이상을 고등교육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율’은 2.8%로 OECD 국가 평균인 2.9%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2%대인 국가에는 핀란드(2.9%), 독일(2.9%), 벨기에(2.9%), 아이슬란드(2.8%), 폴란드(2.6%), 리투아니아(2.3%), 슬로베니아(2.3%), 콜롬비아(2.3%), 체코(2.3%), 스페인(2.2%), 프랑스(2.2%), 이스라엘(2.1%)이 해당된다.

〈표 2〉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율(2018년)

구분		OECD 국가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율	4% 이상 지출	칠레(5.4%), 덴마크(4.3%), 터키(4.3%), 노르웨이(4.3%), 네덜란드(4.0%), 스위스(4.0%)
	3% 이상 지출	뉴질랜드(3.9%), 캐나다(3.8%), 스웨덴(3.6%), 아일랜드(3.6%), 오스트리아(3.5%), 코스타리카(3.4%), 영국(3.4%), 멕시코(3.4%), 미국(3.2%), 호주(3.0%), 에스토니아(3.0%)
	2% 이상 지출	OECD 국가 평균 2.9%, 핀란드(2.9%), 독일(2.9%), 벨기에(2.9%), 아이슬란드(2.8%), 한국(2.8%) , 폴란드(2.6%), 리투아니아(2.3%), 슬로베니아(2.3%), 콜롬비아(2.3%), 체코(2.3%), 스페인(2.2%), 프랑스(2.2%), 이스라엘(2.1%)
	1% 이상 지출	라트비아(1.9%), 슬로바키아(1.8%), 포르투갈(1.8%), 헝가리(1.8%), 일본(1.6%), 이탈리아(1.6%), 그리스(1.4%), 룩셈부르크(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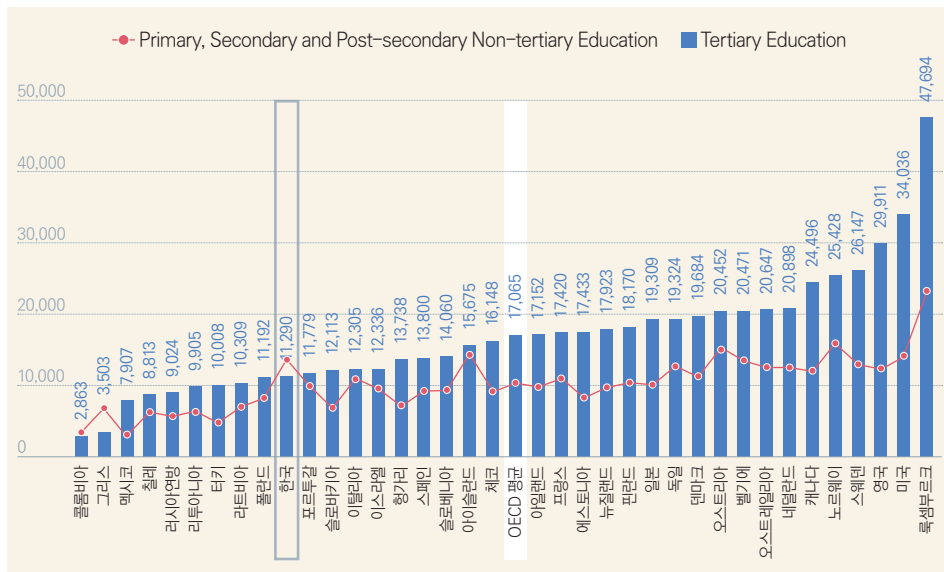
자료: OECD. (2021). 「Education at a Glance 2021」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다음으로 등록학생 수를 고려한 학생 한 명에게 적절한 교육이 투자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이다.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는 \$11,290¹로 OECD 평균 \$17,065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서 공교육비란, 사교육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부담주체에 따라 정부재원과 민간재원(가계 및 기타 민간단체)이 모두 포함된다. 주로 교육의 질을 비교할 때 활용되며, 교육기관에 투입된 재원(정부재원뿐만 아니라, 가계재원과 기타 민간재원이 모두 포함됨)이 개별 학생에서 얼마나 지출되었는가를 의미한다. 산출식은 교육기관에서의 경상비와 자본비를 모두 합친 합계를 등록학생 수로 나눈 값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더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리스와 한국, 콜롬비아만 유일하게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 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학생 1인당 공교육비(초·중등교육/고등교육)(2018년)

(단위: \$)



주: OECD는 교육단계를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체계에 따라 분류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교육단계(Primary, Secondary and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공민학교 등이 해당,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에는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사이버·원격·방송통신 대학은 제외)이 해당됨.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는 중등 후 비고등교육단계로 우리나라는 해당하는 학제 없음
 자료: OECD, (2021). 'Education at a Glance 2021'

● 학생비율 대비 자원의 충분성 측정: 입지계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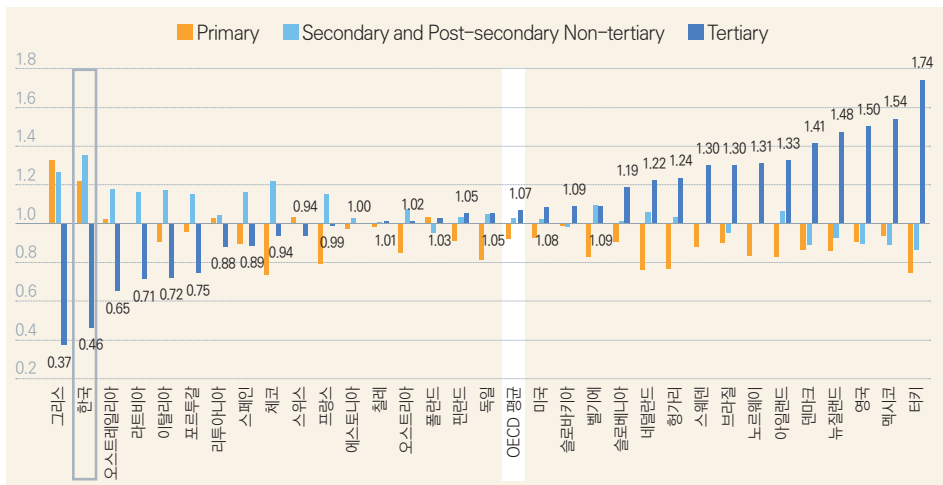
그럼 각 교육단계(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에 참여한 학생에게 얼마나 충분한 자원이 할당되어야 적정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OECD는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²'라는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각 교육 단계(Level)에 참여한 학생 비율을 기반으로 충분한 자원이 할당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

기 위한 방법이다. 특정 교육 단계에 참여한 학생 비율이 해당 교육에 할당된 자원의 비율과 같다면 ‘입지계수=1’로 특정 교육단계가 학생비율에 맞추어 적정수준으로 자원이 할당됨을 의미한다. 만약 1 이상 값이 나왔다면, 해당 교육에 할당된 자원의 비율이 초과됨을 의미하며, 1 미만 값이 나왔다면 할당된 자원 비율이 부족하게 평가됨을 의미한다.

OECD 국가 평균적으로 초등교육은 0.92로, 고등교육은 1.07로 평가되었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초등교육에는 학생 비율보다 적은 자원을, 고등교육에는 학생 비율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은 1.22로 그리스 다음으로 높고, 중등은 1.36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참여 학생의 비율 대비 많은 자원이 고등교육 이전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되는 반면, 고등교육은 0.46으로 그리스(0.37) 다음으로 학생 비율 대비 공적자금이 매우 부족하게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 교육단계별 공교육비와 전일제 학생의 상대적 분배(Distribution)(2018년)

(단위: LQ, parity=1)



자료: OECD. (2021). 「Education at a Glance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OECD 국가의 교육재정 지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OECD 국가 대부분은 교육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조사결과¹에 따르면, 2020년에 OECD 국가의 약 2/3가 전염병에 대응하여 교육예산을 늘렸고, 일반적으로 모든 교육 단계에서 유사하게 증가했다.

¹ \$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평가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로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각국 통화로 표현되는 상대가격비율임.

² 보통 입지계수는 어떤 지역의 산업에 대해 전국의 동일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그 산업의 상대적인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주로 활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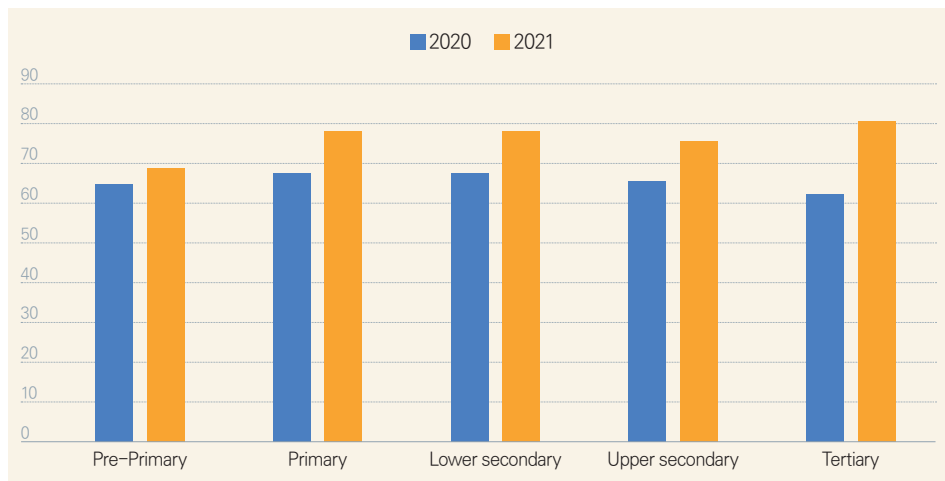
³ OECD. (2021). The State of Global Education(18 Months into the Pandemic).

예산을 안정적으로 늘리거나 유지하는 결정은 일반적으로 국가 내 모든 교육 단계에 일관되게 적용되지만, 일부 국가는 특정 단계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결정을 내린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에서는 봉쇄 이후 경제가 재개됨에 따라 근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교육 예산이 취학 전 교육에만 제공되었고, 헝가리와 한국은 고등교육에만 공적자금(Public Funds)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2020년에는 의무교육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증가한 반면, 2021년에는 초·중등보다 고등교육에 더 많은 재정지출을 늘렸다고 보고하였다. 2020년에는 OECD 국가의 63%가, 2021년에는 OECD 국가의 80%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린 것으로 보고했다.

〈그림 5〉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교육예산 증가를 보고한 국가의 비율

(단위: %)



자료: OECD. (2021). 「The State of Global Education(18 Months into the Pandemic)」

시사점

지금까지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전체 정부지출에서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3.1%로 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초·중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있으며, 학생 1인당 교육자원의 충분성을 평가한 입지계수 분석에서 역시, 초·중등교육에 학생 비율 대비 자원이 충분하게 할당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전체 정부지출에서 고등교육 예산은 2.8%로 OECD 국가 평균인 2.9%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에 대한 투자는 \$11,290으로 그리스, 콜롬비아,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초·중등교육보다 더 적게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각국의 학령인구 구조, 대학진학률, 국공립 및 사립대 비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교육비 중 고등교육비를 단순 비교해 고등교육 투자의 적

절성을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경제불황 속에서 OECD 국가는 어떤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지출을 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국제지표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을 설명하였으나 총론을 넘어 각론, 즉 “그래서 어떻게 고등교육 재원을 더 늘릴 것이냐”에 이르면 여러 이해가 부딪힌다. 특히, 주어진 교육예산 범위 내에서의 지출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면 더욱 그렇다.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내국세 일정비율이 교부되면서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예산이 할당되는 현행 초·중등 교육 예산배분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최근 부쩍 늘고 있는 것도 이런 조정 수요가 반영된 흐름일 것이다. 고등교육 자원 확보를 위해 교육예산 범위 안에서의 지출 조정은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숙제가 아닌 만큼, 교육계가 앞장서서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기획재정부. (2021.8). 2022년 예산안 주요 내용 보도자료.
- 교육부. (2021.8.).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편성. 보도자료.
- 한국재정정보원. (2021). 「2021 주요 재정통계」.
- OECD. (2021). 「Education at a Glance 2021」.
- OECD. (2021). 「The State of Global Education(18 Months into the Pandemic)」.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ebearth@klri.re.kr)



지난 2021년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20년 8월 4일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제안된 8개의 그린뉴딜, 기후위기, 탄소중립 관련 법안을 통합하여 환경노동위원회가 대안을 발의함으로써 관련된 입법 제안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96개국이 참여하여 2016년 11월에 발효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협정에 비준한 후 참여 의지는 나타내었으나 행동에 있어서는 그다지 적극성과 구체성 그리고 체계성을 띤 제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	심상정 의원	2020.8.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이소영 의원	2020.11.11.
기후위기대응법안	안호영 의원	2020.12.1.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유의동 의원	2020.12.18.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강은미 의원	2021.4.23.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임이자 의원	2021.6.16.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	이수진 의원	2021.6.18.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의원	2021.7.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환경노동위원회	2021.8.25.

이에 반해 국제적 상황은 지난 20여 년의 성과에 힘입어 최근 더욱 급격히 추진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6년 파리협약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섭씨 2℃ 이하 상승(1.5℃를 넘지 않도록 노력)'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후, 지난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 총회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전(1850~1900년 평균) 대비 1.5℃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율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한다.

이에 가장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은 유럽연합(EU)이었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19년 12월 'EU 그린딜(Green Deals)'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2020년 9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제정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체계를 확립했다. 그리고 이에 앞서, 2020년 1월에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과 공정전환기금 규칙(Just Transition Fund Regulation)을 공표하고 이행을 위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현실적인 이행의 재원을 확보했다.

탄소중립정책추진에 있어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적정한 목표와 수단이다. EU는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 합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2012년까지 8% 감축, 2020년까지 20% 감축,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 다시 2030년까지 55%를 감축하는 목표를 상향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EU 그린딜은 에너지·산업·교통·건설 등 부문별 온실가스 저감 대책과 저탄소친환경경제(농식품, 생물다양성, 오염물질 배출감소 등)로의 공정전환(기금조성, 일자리, 교육 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공정전환기금 등) 및 법적 수단(기후법, 탄소국경세 등)을 통합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UN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의 제출 시한이 도래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12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이 추진 전략은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채택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중심의 적응적 감축에서 신 경제사회 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 대응으로 나가야 한다”며 중심 전략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제시했다.

과거 녹색성장기본법 하의 녹색성장정책도 저탄소화와 경제산업에 있어 녹색기술, 녹색산업 등의 육성 및 활성화 등을 제시했으나, 탄소중립정책은 공정전환을 중요한 정책요소로 제시함에 따라 경제사회변화에 따른 충격의 안정화와 정책추진의 현실화를 도모한 점이 차별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방향을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정책을 재확보, 녹색금융, 신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추진하고 특히, 탄소가격 시그널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탄소중립 기술 및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조직적 추진체제로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사무처 조직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5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다. 지난 5월 4일, 대통령령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참여지향적 위원회조직을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 및 국가 정책 수립,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이행계획의 이행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 등 광범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이행방식에 대하여 심의할 권한을 가지게 됐다.

지난 8월 말 통과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는 처음으로 감축 목표를 법률상의 목표로 제시했으며, 대통령령에서 제시된 추진체계와 정책수단들이 보다 구체화됐다. 이 법에 따르면,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의 기능에 ‘심의’에 추가하여 ‘의결’ 권한을 명시했으며, 심의·의결 사항에 중장기감축목표 설정, 기후위기 적응대책, 재원의 배분 등에 대한 내용 그리고 녹색성장 관련 표현을 추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계획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구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와 같은 추진체계에 더하여, 기후변화를 정책 및 사업추진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했다. 기후변화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을 사전에 스크린하도록 했다. 그리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기관들이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 특구지정을 통해 금융, 조세상의 지원을 포함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의 저탄소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자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진단, 위험공개제도를 마련했다. 그 밖에도 국민참여플랫폼을 통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위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이러한 전방위적인 정책수행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기금의 사용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이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기술 개발, 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되며,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법은 그동안 탄소중립추진을 위하여 제시된 많은 내용들 가운데,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목표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의 설립,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설립 등 주요 정책방향 설정과 추진기반 및 수단들을 담아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적용대상과 영향범위를 고려할 때, 앞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하는 일은 산적해 있다. 특히 재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또한 정부영역에서의 재정지출 또는 조세지원 및 민간영역에서의 투자나 용자 시 판단지표가 되는 녹색금융지표들이 구체적으로 개발·제시되어야 자금의 흐름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행위나 기업활동으로 보다 원활히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후대응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입법적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법의 입법취지와 민간 영역에서의 확산효과를 고려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외에도 탄소중립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개정을 통한 확대적용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막대하게 투여되는 조직적, 재정적 자원들이 효율 및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수립 및 이행 단계에서 스마트하면서 참여적인 정책효과 평가수단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탄소중립위원회가 국민정책참여단을 통해 주요 정책의 입안 및 이행에 대한 정책실험 및 정책평가를 수행할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의 도입 및 이행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효과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책실패의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탄소중립 추진과 재정정책 방향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hkim@kdi.re.kr)



대기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2010년대 중반부터 미세먼지(PM₁₀) 및 초미세먼지(PM_{2.5})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했다. 그와 맞물려 2014년부터 미세먼지 예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2015년에는 초미세먼지의 공식적인 측정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대기질에 대한 공식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히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유지되는 기간에 빛의 산란 효과로 인해 뿌연 대기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 사이에 대기질 수준에 따른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점차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이후 각종 관리강화 대책들을 발표·시행했다. 나아가 2019년 3월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되었다.

그렇다면 최근의 대기질 수준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진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연평균 $23.3\mu\text{g}/\text{m}^3$ 및 $23.4\mu\text{g}/\text{m}^3$ 수준이었다가 2020년에는 $18.9\mu\text{g}/\text{m}^3$ 로 낮아졌다. 서울로 국한하더라도 유사한 변화($23.0\mu\text{g}/\text{m}^3$ [2018], $24.8\mu\text{g}/\text{m}^3$

[2019], $20.8\mu\text{g}/\text{m}^3$ [2020])가 확인된다. 이러한 농도변화의 배경에는 국내 미세먼지 관련 정부정책을 포함하여 중국발 영향의 변화, 시기별 기상상황,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정책의 구체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아직까지 대기질 상황이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관리대책들을 꾸준히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던 2010년대 중반에 전 세계적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2015년 12월)에서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를 통해 196개의 선진국 및 개도국들이 2050년까지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방안(NDC)을 수립하는 것을 약속했으며, 우리나라도 참여국가로 포함되어 있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전략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신기후체제에 돌입한다고 일컫는다. 2019년 9월 개최된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하여 2050년 탄소중립(Net-Zero Emissions)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의 수립이 촉구되었다. 탄소중립의 추진 및 달성이 글로벌 어젠다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2021년 9월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 국가 및 EU가 탄소중립 추진을 법제화했다.

이와 같은 국제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원동력 중 하나는 선진국의 감축 노력만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측면을 들 수 있다.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피해는 주로 호흡기를 통한 건강영향 측면에서 발생하고 피해의 발생 범위가 어느 정도 국지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반면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한 피해는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현상을 거쳐 광범위한 지리적 범위에 예측하기 힘든 피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은 대기오염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심각성이 피부로 와닿기 힘들고, 오염원인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이끌어내기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리협정을 계기로 초국가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이 지속적으로 촉구되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주요 선진국 위주로 필수재원의 조달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마련되고 있다. 최근의 주요국 재정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충격 대응을 위한 각국의 중장기 경기부양 정책에서 탄소중립 목표가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2019년 말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으며, 향후 10년 동안 약 1조유로 규모의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했다. 공공부문 투입 계획 중에는 약 1,000억유로를 동원하는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가 포함되어 있다. 이후 2020년 4월에 유럽그린딜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Frans Timmermans)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모든 재원을 녹색전환 및 디지털전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간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 보고서들에서도 앞으로 경제복구를 위해 진행되는 투자계획들이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겨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고 화석연료 관련 보조금을 개편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재정지출은 실제 얼마만큼 녹색화가 이뤄지고 있을까? 2021년 UNEP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최근 재정지출 가운데 녹색지출과 관련된 실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위기로 말미암은 충격을 복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전 세계 복구비용 투입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5조달러로 나타났고, 이때 녹색지출(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지출)의 비중은 국가단위에서 평균 18%로 도출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별로 'GDP 대비 복구비용지출 비중'이 1% 이상이면서 '복구비용지출 내 녹색지출의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에 선도국가(Current Leaders)로 분류한 반면, 전자가 1%가 넘지만 후자가 30%보다 낮은 국가들은 (녹색지출을 통해 위기 복구와 함께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Missing Opportunities) 국가로 규정했다. 대체로 유럽의 독일,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등이 선도국가로 분류되었고, 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 등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 탄소중립 추진이라는 두 목표가 점차 결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자원조달 계획과 녹색예산 운용 방안의 마련도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다. 유럽그린딜의 경우 InvestEU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투자 유치를 도모할 계획이며, 유럽투자은행그룹과 각국 은행들의 참여하에 약 2,790억유로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 산하 금융자문단(AGF)의 2021년 최근 보고서에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15가지 주요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바라볼 때 탄소중립 추진 관련 각종 투자 수요를 전략적 기회로 인식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설계가 강조되었다.

결국 탄소중립 달성과 관련해 재정투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재정지원 체계와 투자계획을 탄소중립 관련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조정해 나가야 한다. 둘째, 주어진 정보하에서 탄소중립 추진 및 공정한 전환에 필수적인 소요재원을 파악한 뒤, 공공영역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사업들을 구체화해야 한다.

전술한 두 가지 정책방향에 대해 좀 더 부연하고자 한다. 전자는 탄소비용의 가격시그널 강화와 녹색재정운용 방안의 마련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현행의 에너지세제를 개편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탄소비용의 가격시그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개편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장려하는 방향의 각종 조세지원과 보조금 제도는 과감히 축소 및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투입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요인 외에 기후·환경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기 위한 녹색예산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녹색예산제도의 실질적 운영방안으로서 녹색예산태깅이나 녹색조건부여 등을 일부 영역에 시범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후자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이 급선무다. 국내의 경우 지난 8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초안이 발표된 상황에서, 향후 시나리오가 확정되면 각 시나리오하에서 각종 부문별 탄소중립 추진방안들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재원소요액을 파악하는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재정투자 계획에서도 나타나듯이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투자는 인프라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초기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필요한 국가재정 투입액을 확정함으로써 민간영역의 투자를 조기에 견인할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정책방향하에서 가격시그널 강화로 인한 추가적인 세수확보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소요를 감안한 기금마련방안도 선언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세부 운용방안의 제시가 뒤따라야 하겠다.

2050년에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앞으로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그간 나름의 경로로 발전해온 우리 경제의 체질을 크게 바꿔야 하는 가운데, 기술개발과 국제정세 변화 등의 불확실성을 등에 업고서 계속해서 속도를 내야 한다. 이는 최근 수년간 추진해온 미세먼지 관리대책보다 더욱 높은 강도의 노력을 더 넓은 범위에 쏟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결국 더 많은 국가재정의 투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야말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정투입이 절실하다. 향후 정책수립 시 전술한 방향들이 온전히 스며들으로써 경제 생태계가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재정정책이 튼튼한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1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지은초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anncho@kpfis.or.kr)

2021년 8월 말 기준

총수입 **397.5조원**
(누적 기준)

2021년 예산
514.6조원

진도율
77.2%

397.5조원

총지출 **427.3조원**
(누적 기준)

2021년 예산
604.9조원

진도율
70.6%

427.3조원

* 2021년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29.8조원 적자
(누적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수치

전월 대비

-9.1
조원

관리재정수지

70.2조원 적자
(누적 기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수치

전월 대비

-13.2
조원

국가채무

927.2조원
(누적 기준)

중앙정부
채무 기준

전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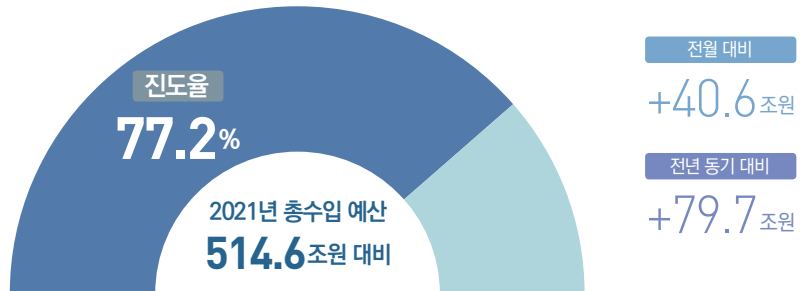
+13.0
조원

주: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1.1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총 수입

• 2021년 8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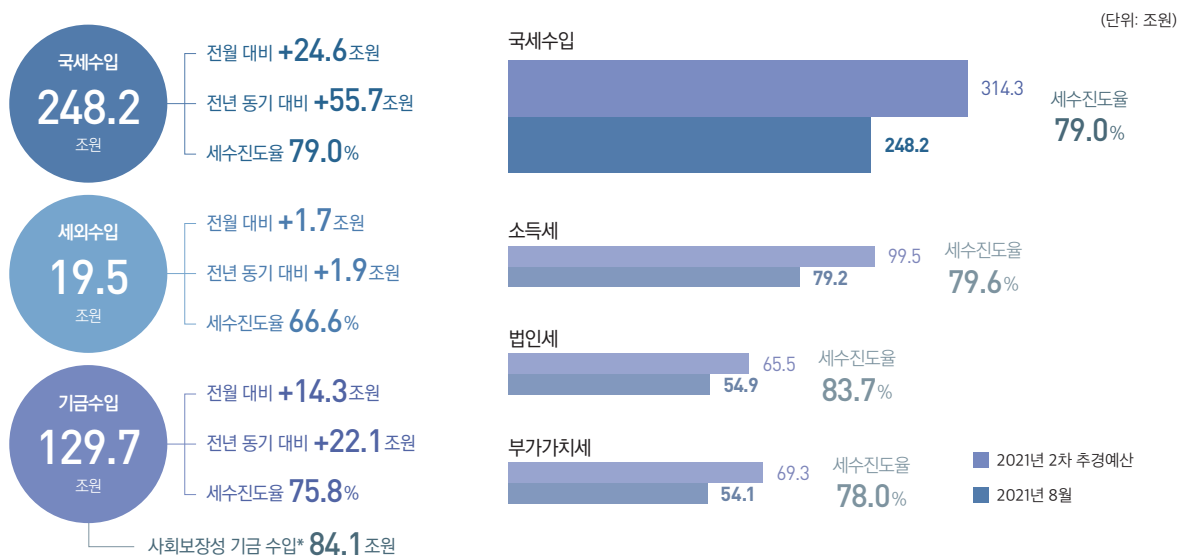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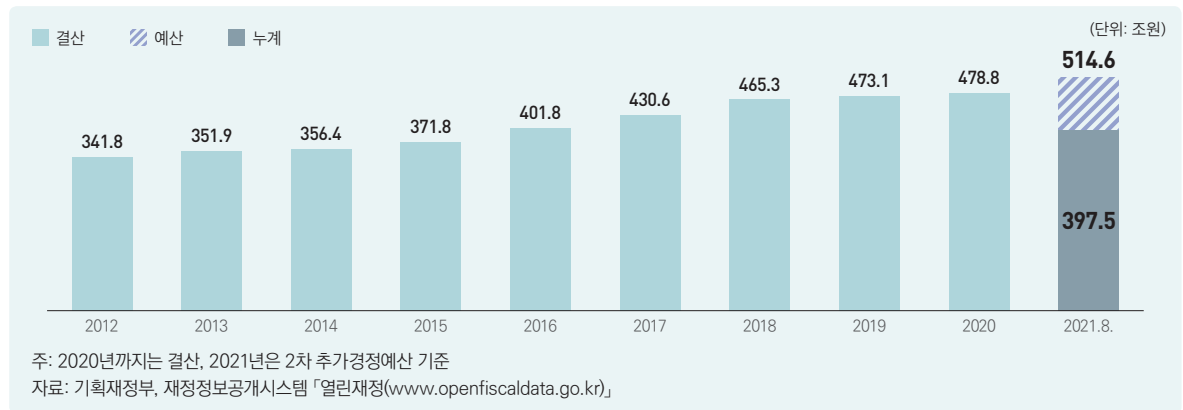
총수입
397.5
조원



주 1)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1년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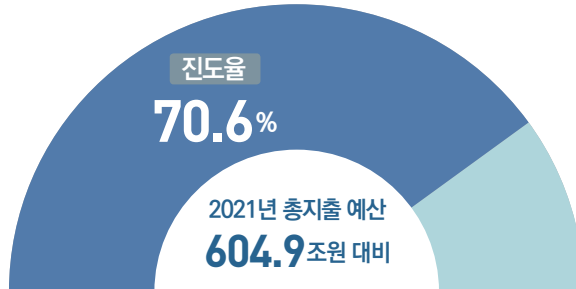
*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주: 세수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총 지출

• 2021년 8월 말 기준

총지출
427.3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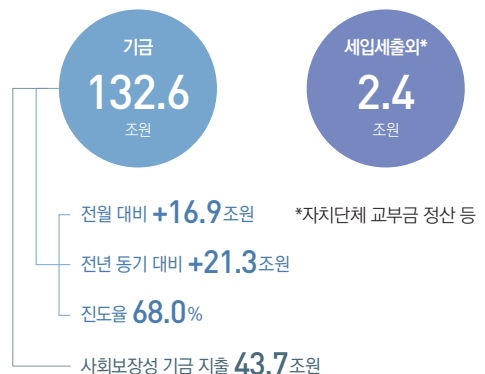
전월 대비
+49.7조원

전년 동기 대비
+38.6조원

주 1)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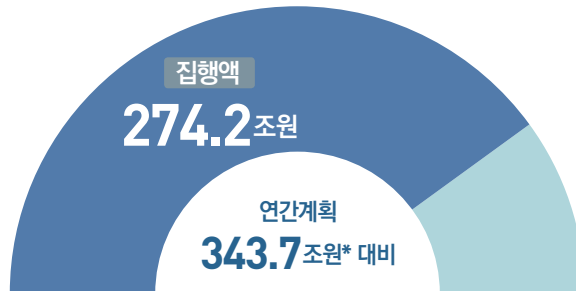
2) 2021년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연간계획 대비
7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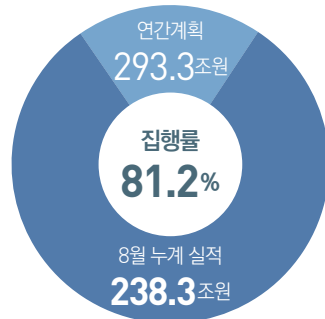


전월 집행액 대비
+24.7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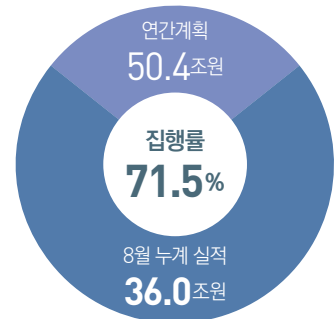
전월 연간계획 대비
+7.2%p

* 2020년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연간계획 수정(341.8조원→343.7조원)

중앙부처



공공기관



(단위: 조원, %)

집행률
상위 5개 부처
(누적 기준)

	부처명	8월 실적	집행률
①	중소벤처기업부	17.7	122.2
②	고용노동부	6.1	91.1
③	산업통상자원부	9.0	87.2
④	행정안전부	41.6	84.9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7	84.6

주 1)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47개 중앙행정기관과 40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2) 집행률은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 대비 당월 누계 실적 규모의 비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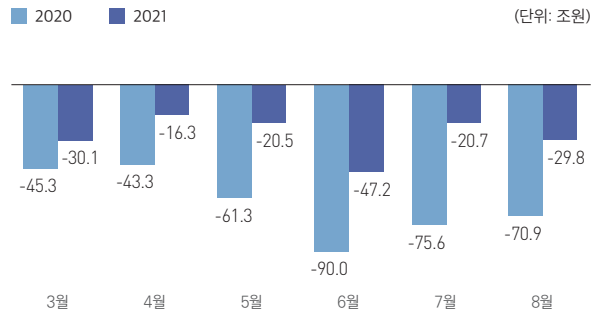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수지

• 2021년 8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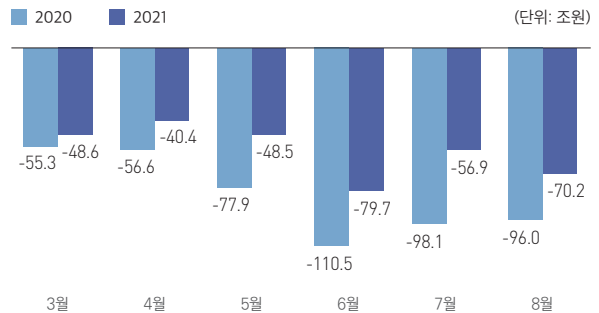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
29.8조원
적자

전월 대비
-9.1조원
전년 동기 대비
+41.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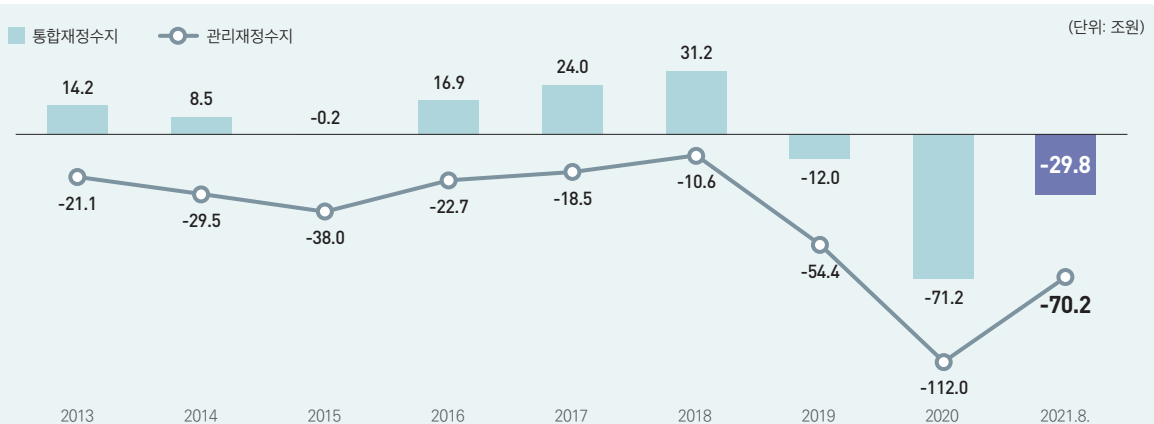
관리재정수지
70.2조원
적자

전월 대비
-13.2조원
전년 동기 대비
+25.8조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0.4조원
흑자

-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2020년까지 결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국가채무

• 2021년 8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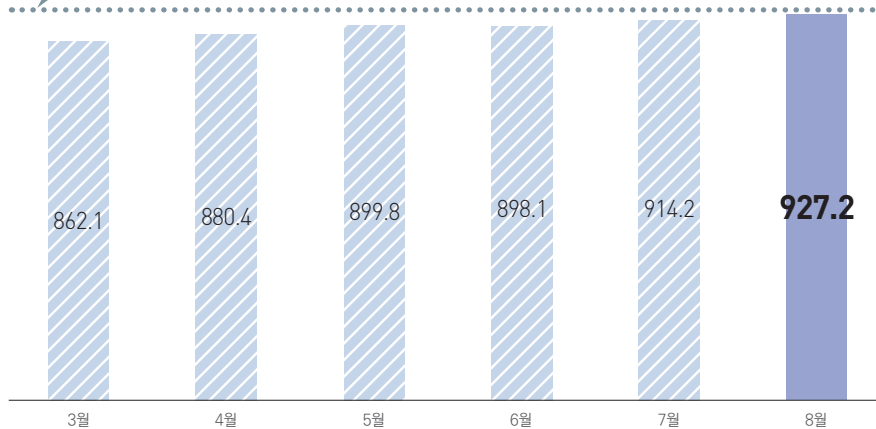
중앙정부 채무
927.2
조원

전월 대비
+13.0조원

전년 대비
+108.0조원

2021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937.8조원**

(단위: 조원)



주: 2021년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누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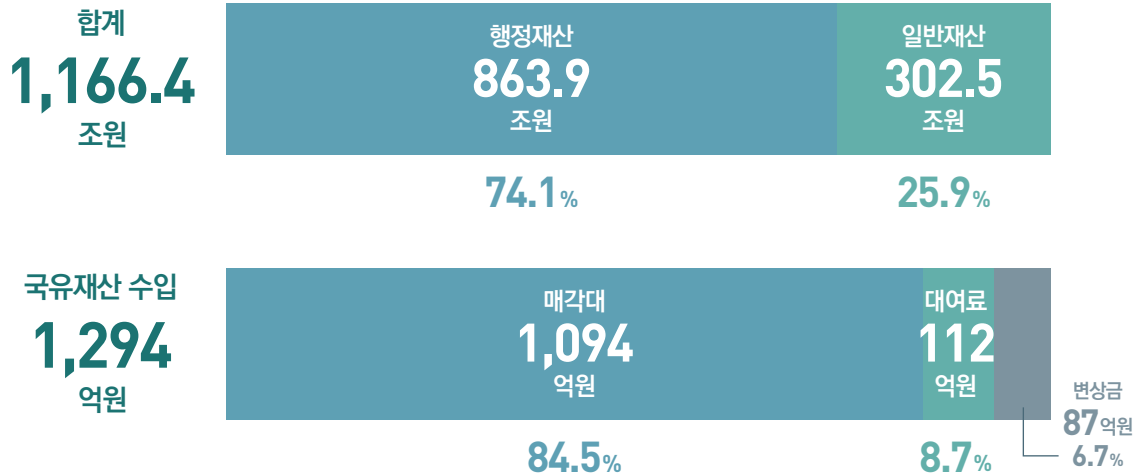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2021 숫자로 보는 나라재산

지은초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anncho@kpfis.or.kr)

• 2021년 8월 말 기준



국유재산 취득
1조 3,412억원
국가가 매수, 교환 등을 통해
자산상의 순증을 가져오는 행위



토지
6,210억원
(46.3%)

건물
5,311억원
(39.6%)

기타
1,890억원
(14.1%)

국유재산 처분
9,250억원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행위



토지
4,166억원
(45.0%)

건물
4,239억원
(45.8%)

기타
845억원
(9.1%)

* 「2021 숫자로 보는 나라재산」은 기획재정부 「월간재정 동향 및 이슈」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국유재산의 관리정보는 e나라재산 「국유재산 포털」(www.k-pi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 유 재 산

• 2021년 8월 말 기준

국유재산
1,166.4
조원

전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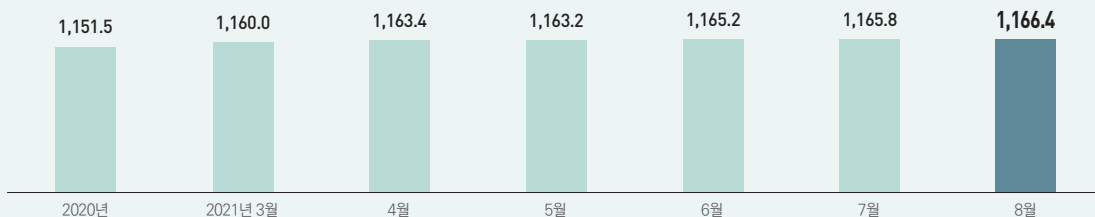
+0.6조원

전년 대비

+14.9조원

*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

(단위: 조원)



주: 2020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21년 자료는 잠정

행정재산
863.9
조원



74.1%



25.9%

일반재산
302.5
조원

* 국가의 공공재산(청사, 관사), 공공용재산(도로, 하천, 공원), 기업용재산(정부기업 재산), 보존용재산(문화재 등)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단위: 조원)

행정재산	구분	일반재산
491.0	토지	31.6
74.3	건물	2.0
287.7	공작물	0.1
0.9	기계기구	-
5.5	입목죽	2.2
2.3	선박·항공기	-
-	유가증권	266.6
1.5	무체재산	-

주 1) 공작물: 국유지 또는 국유건물에 부착된 철탑, 울타리 등 시설물

2) 입목죽: 국유지상에 식재된 나무 또는 대나무

3) 무체재산: 지상권, 전세권, 지식재산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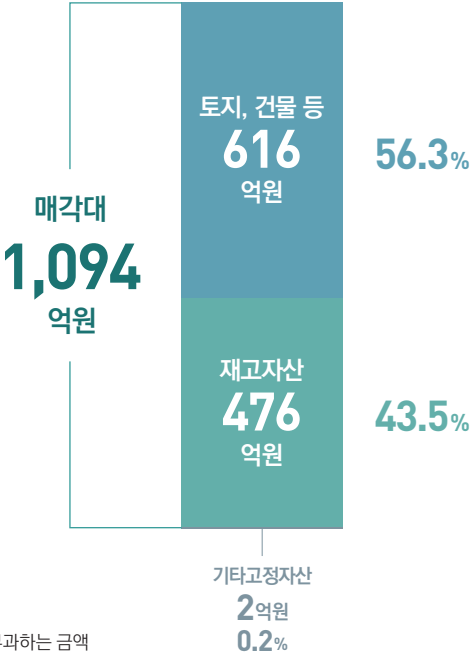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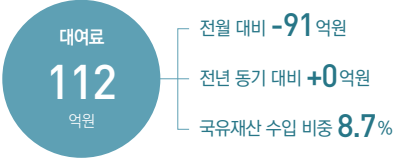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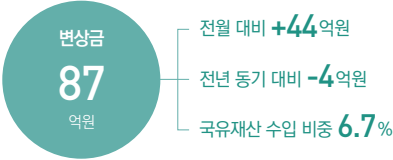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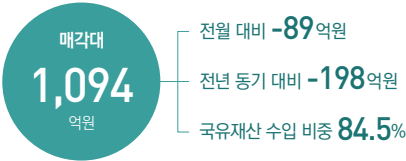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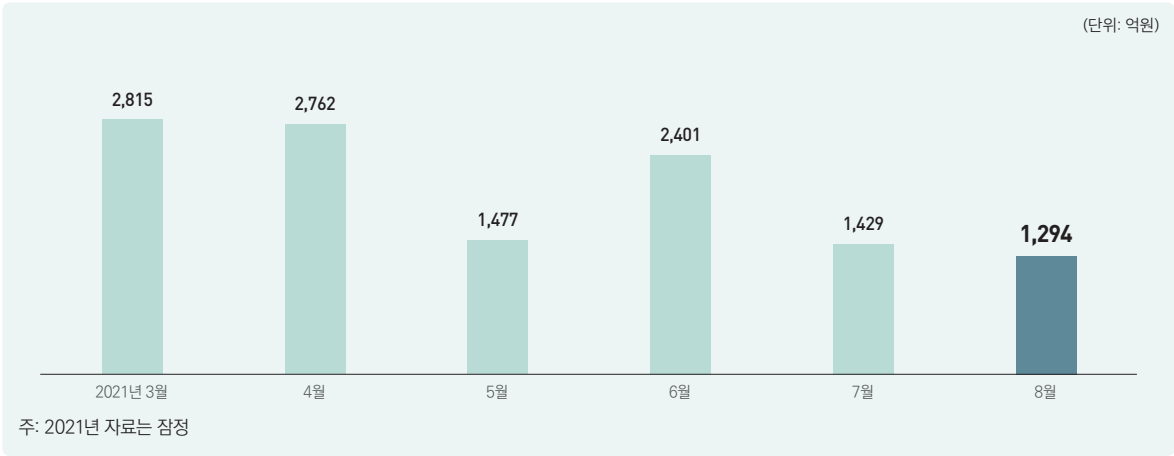
국 유 재 산 수 입

• 2021년 8월 말 기준

국유재산 수입
1,294
억원

전월 대비
-135억원

전년 동기 대비
-20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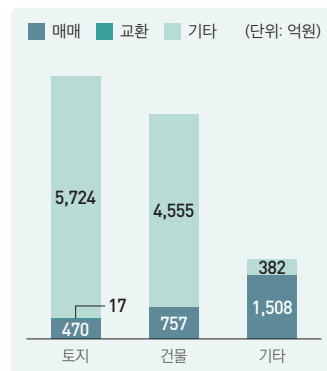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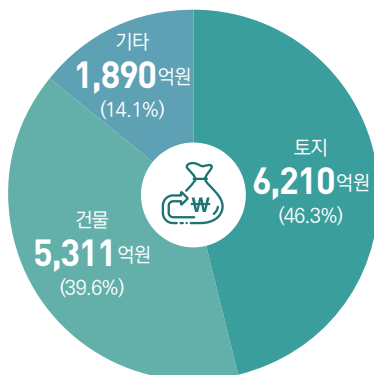


주 1) 매각대: 일반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수납한 대금
2) 변상금: 사용허가·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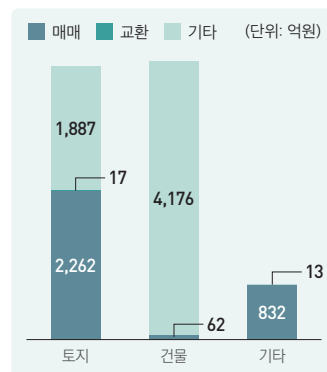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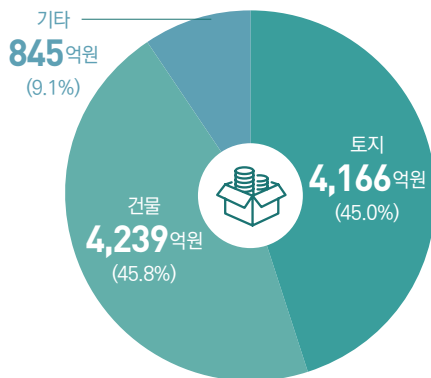
국유재산 취득·처분

• 2021년 8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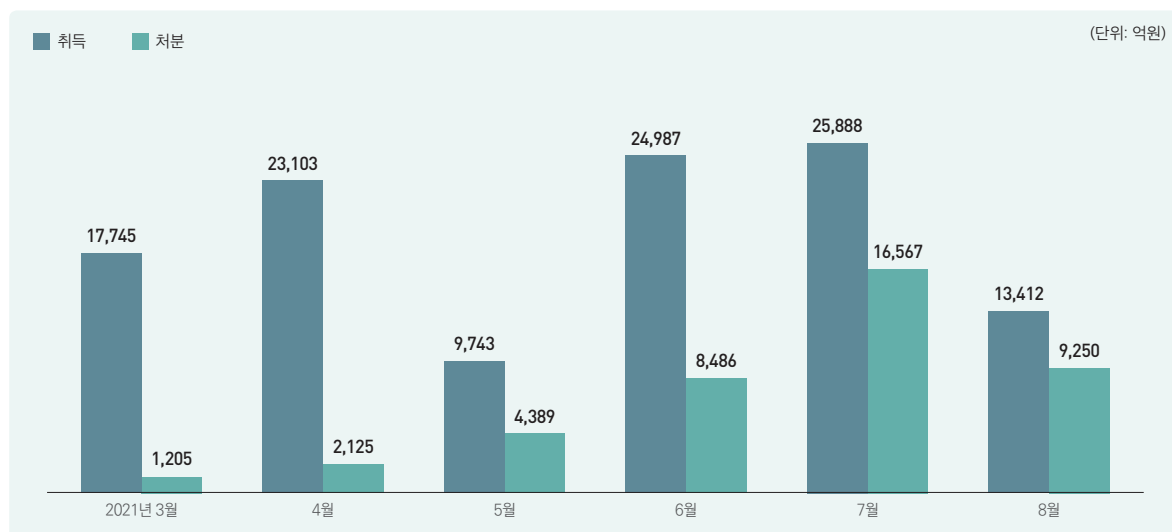
국유재산 취득
1조 3,412
억원



국유재산 처분
9,250
억원



주: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국가재정통계 공식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수입

정부는 사회복지, 국방, 교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세, 정부 보유 재산의 매각, 국공채 발행, 각종 수수료 등으로 수입을 마련합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 모두 수입을 마련하여 지출 활동을 수행하지만 그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가계는 노동 등 생산요소의 공급으로, 기업은 생산한 물품이나 용역의 판매로 수입을 얻지만, 정부는 조세라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조달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수입에 대한 정보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개념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예산 및 기금 > 예산의 이해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예산 및 기금 > 예산의 이해에서는 예산의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예산구조, 세입·세출예산의 구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관, 항, 목으로 구분·관리되며 이를 도표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소년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재정웹툰 | 알기쉬운 나라살림

재정이란? | **예산 및 기금** | 국유재산 | 인기금투자물 | 국고 | 부채 | 국제 | 조세 | 회계결산 | 주요재정제도

예산의 이해 | 기금의 이해 | 예산 및 기금 지침

예산이란 무엇인가?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예산구조] - (1) 세입·세출예산의 구조

■ 세입·세출예산의 구조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편성·운용된다. 즉 세입과 세출 경비가 대응되어 어떤 세입으로는 어떠한 세출에만 충당하도록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수입(단체경비와 특별회계 등)이 있다. 세입예산은 크게 국내수입과 해외수입으로 분류된다. 국내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내국세와 관세, 교통세 및 특정 목적에 용도가 한정된 주세와 농특세로 구성된다. 해외수입은 국제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데 정부출자수입, 벌금 등의 경상해외수입과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세입예산」은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구조가 관, 항, 목으로 구분·관리된다.

■ 세입예산 과목 구조

관	항	목
01 내국세	11 소득세	111 신고분
11 재산수입	51 관유물대여료	112 원천분
		511 토지대여료
		512 건물대여료
		513 기타관유물대여료

2 현황

알기 쉬운 재정 > 한눈에 보는 재정 > 우리나라 재정 현황 > 중앙재정 > 수입

알기 쉬운 재정 > 한눈에 보는 재정 > 우리나라 재정 현황 > 지방재정 > 수입

알기 쉬운 재정 > 한눈에 보는 재정 > 우리나라 재정 현황 > 지방교육재정 >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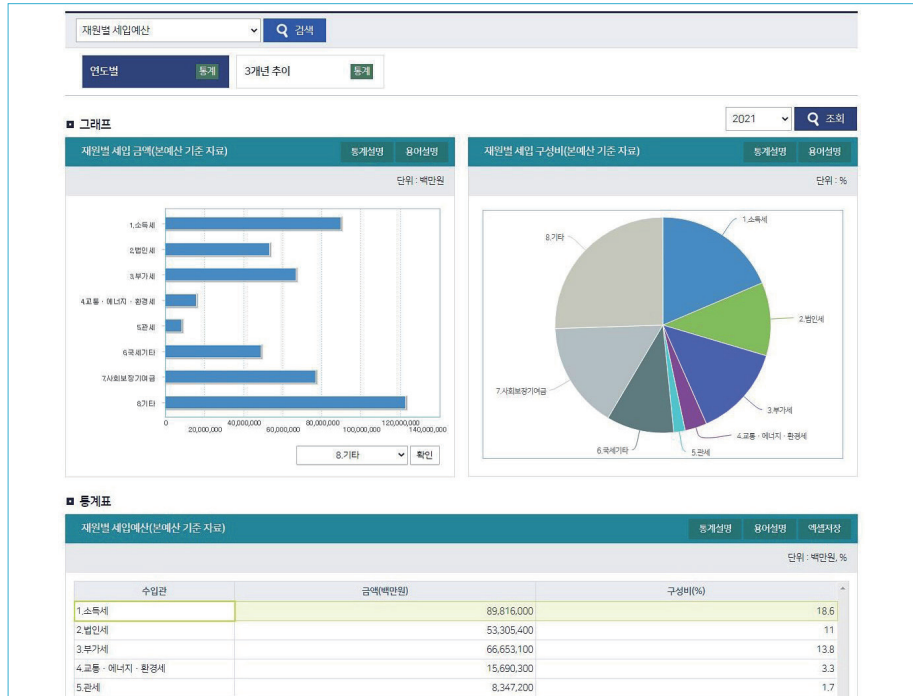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자원별 세입예산 > 연도별, 3개년 추이

알기 쉬운 재정 > 한눈에 보는 재정 > 우리나라 재정 현황에서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수입 추이를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입 추이와 함께 중앙재정 > 수입에서는 선택한 연도의 자원별 세입 금액과 구성비를 다양한 그래프 형태로 보여줍니다. 지방재정 > 수입과 지방교육재정 > 수입에서는 자원별 세입예산 금액과 지역별 세입예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수입과 관련한 더 자세한 데이터는 지방재정정보 공개 사이트(지방재정365), 지방교육재정정보 공개 사이트(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페이지 하단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재원별 세입예산**에서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로, 재원별 세입 금액과 구성비를 그래프와 통계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한 연도를 기준으로 3개년 재원별 수입 추이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재원별 세입예산과 3개년 추이는 올해 말 예산이 확정된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데이터·문서자료

-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예산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액) 등 6종
-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집행 > 월별 수입징수상황 등 3종
-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세입/수입 결산 현황 등 5종
-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수지 > 총수입, 국세수입 등 4종
-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지방재정 > 세입예산, 세입결산 등 6종
-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지방교육재정 > 세입예산, 국세수입 등 5종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에서는 예산, 집행, 결산, 수지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세입 또는 수입 관련 데이터 및 문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예산 기준으로는 총액과 총지출 기준의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 등 6종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각 데이터에서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의 각 연도별 △소관명 △회계명 △계정명 △수입관명 △수입항명 △수입목명 에 따른 정부안금액과 국회확정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는 3종, 결산 과정에서는 5종의 수입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수지와 관련된 수입 자료 4종, 지방재정 세입 자료 6종, 지방교육재정 세입 자료 5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목록

문서별

생산기관별

자료출처별

동계분류

동계목록 다운로드

+

-

펼침닫기

예산

예산

데이터자료

지

집행

결산

상과평가

국세통계

채무

수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재정데이터명

세입

검색

SHEET

CHART

FILE

LINK

Open API

전체 6건, (1/1page)

재정데이터명	서비스 유형	공표 시기	생산 기관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액) 세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 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	SHEET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예산실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단년도, 세입/수입 예산편성 현황을 총수입 기준, 세입순계 기준으로 제공함...	SHEET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예산실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외화) 세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 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	SHEET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예산실
세입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 - 예산은 추경이 반영된 자료입니다.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	SHEET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예산실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액)

파일 용이설명

메타정보열기

SHEET

OPEN API

회계연도

2021

조회

세부조건 열기

XML

JSON

XLS

CSV

TXT

No	회계연도	소관영	회계명	개정명	수입관명	수입항명	수입목명	정부안금액(천원)	국회확정금액(천원)
1	2021	감사원	일반회계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20,000	20,000
2	2021	감사원	일반회계		수입대계경비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475,000	475,000
3	2021	감사원	일반회계		재산수입	관유물대여료	건물대여료	19,000	19,000
4	2021	감사원	일반회계		재산수입	관유물대여료	토지대여료	1,000	1,000
5	2021	감사원	일반회계		제약및용역판매...	잡수입	기타잡수입	94,000	94,000
6	2021	개인정보보...	일반회계		경상이전수입	가산금	가산금	7,000	7,000
7	2021	개인정보보...	일반회계		경상이전수입	벌금,몰수금및과...	과징금	2,730,000	2,730,000
8	2021	개인정보보...	일반회계		경상이전수입	벌금,몰수금및과...	과태료	1,547,000	1,547,000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분류	형태	데이터명	분류	형태	데이터명
예산	데이터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액)	수지	데이터	총수입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국세수입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외화)			세외수입
		세입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			기금수입
집행	문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지방재정	데이터	세입예산
		추경안 세입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안)			재원별 단체별 세입예산
		월별 수입징수상황			세입결산
		월별 수입운용상황			재원별 회계별 세입결산
결산	데이터	일별 수입운용상황	지방교육재정	데이터	성질별 단체별 세입결산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지역통합 세입결산
		세입/수입 결산 현황			세입예산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재원별 단체별 세입예산
		회계별 세입 결산 현황		문서	세입예산(결산)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현황			재원별 단체별 세입예산(결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4

기타 정보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 > '수입' 또는 '세입' 검색

수입과 관련한 재정당국의 주요 발표자료는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에서 '수입' 또는 '세입'으로 검색하면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 등과 같은 총 135건의 정부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총 71건

수입

Q 검색

제목	첨부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
(보도자료)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		조세분석과	2021-08-31	9
필리핀산 수입물품 123개 품목 관세 인하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2021-07-06	4
수입 마스크 및 MB필터 무관세(할당관세) 시행		산업관세과	2020-03-17	17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		국고과	2018-05-11	12
김동연 경제부총리, 수입철강 관세부와 면제를...		통상정책과	2018-03-11	8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 시행		국고과	2017-06-27	7
최상목 1차관, 한-미 FTA 5주년 맞아 대미 수입기...		통상정책과	2017-03-14	5
국세 수입 관리를 체계화하여 장기고액 채납 죄...		재정성과평가과	2016-12-27	3
수입인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국고과	2016-03-22	2
[보도해명] 151117 아시아경제(인터넷판)수입맥...		관청에너지세제과	2015-11-18	8

총 64건

세입

Q 검색

제목	첨부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회계결산과	2021-02-09	15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		조세분석과	2020-09-01	34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		회계결산과	2020-02-10	56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		조세분석과	2019-08-29	38
2018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회계결산과	2019-02-08	42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		조세분석과	2018-08-28	35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회계결산과	2018-02-09	43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		조세분석과	2017-08-29	3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회계결산과	2017-02-09	31
2017년 국세세입 예산안		조세분석과	2016-08-30	24

이달의 이슈키워드

미사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미사일’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우리 해군의 도산안창호함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한데다, 정부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연관 키워드로는 ‘탄도미사일’, ‘국방중기계획’, ‘발사’ 등이 도출됐다. 이번 호 「나라재정」에서는 국가안보 강화차원에서 정부의 국방첨단전력 관련 재정사업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연관어

탄도미사일

국방중기계획

발사

순항미사일

시험

개발

미국

사거리

SBLM

방어

도발

군사

국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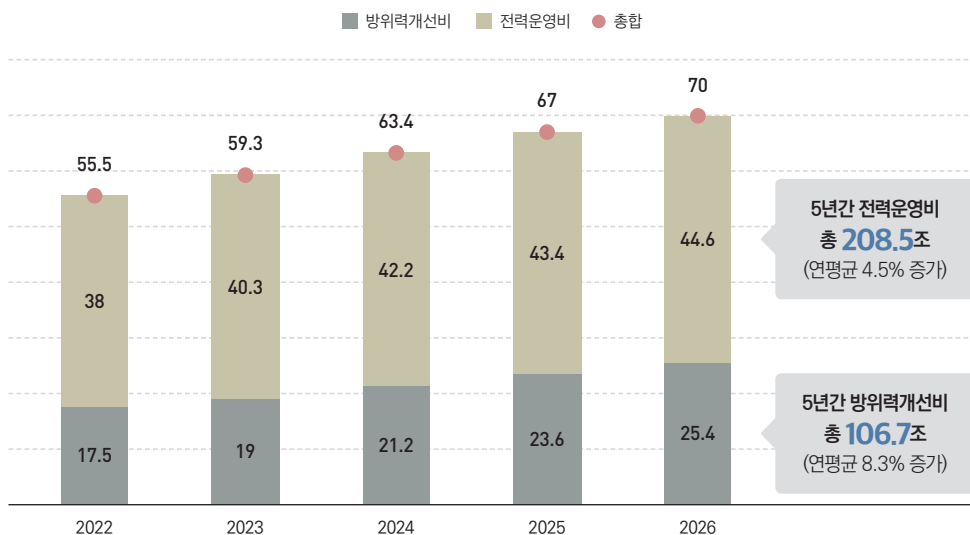
기술

주지하다시피, 지난 9월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¹)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다. 정부는 1~2차례 시험발사를 더 진행한 뒤 SLBM의 양산 및 실전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SLBM과 함께, 세계 최고 중량의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도 이날 발사에 성공했다. 그중 초음속 순항미사일(마하 2~3)은 기존 미사일(시속 1224km)에 비해 속도를 현저히 높여 미사일의 생존력과 파괴력을 더 향상시켰으며, 곧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2톤 이상 탑재하여 파괴력을 높였으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스텔스 설계를 통해 정밀 항법·유도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9월 2일 정부가 발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도 SLBM 등과 같은 첨단무기의 개발·확보를 통해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미래형 기술 강군을 목표로 우리나라 국방의 안보태세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315.2조원을 투입하는데, 이는 작년보다 14.5조원 증가한 것이다. 그중 방위력개선투자는 6.6조원이 증가한 106.7조원이며, 전력운영비는 7.9조원이 증가한 208.5조원이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두므로써, 방위력개선투자 비중을 2021년 32.2%에서 2026년 36.2%로 4%p 늘렸다.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 재원

(단위: 조원)



자료: 국방부, (2021). 「2022~2026 국방중기계획」 재구성

1.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의미한다.

국방첨단전력 관련 주요 재정사업

정부는 국가안보와 미래 주도 강군을 건설하고자 국방전력확보 및 운영·유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첨단무기체계 적기확보 △국방 R&D △글로벌 방산시장 확대 등과 관련된 재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첨단전력 관련 주요 재정사업 예산

(단위: 억원)

관련 사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술정보통신체계	5,483	3,500	2,850	5,861	5,797
핵심기술개발	2,705	3,027	3,945	6,318	7,668
방위산업 수출지원	55	257	450	519	638

주: 2021년까지는 본예산, 2022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사업예산 시계열」, 재구성

● 전술정보통신체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²)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 체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무선네트워크 위주의 기반 통신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5,797억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2013년부터 기존의 통신기반체계(SPIDER)를 대체하여 고속, 대용량, 원거리, 무선중계 전송 등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정부는 TICN을 도입해 SPIDER과 전투부대 무전기를 디지털 방식 통신 체계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TICN은 군 작전 차량에 탑재된 이동기지국과 데이터를 기간망으로 연결하여 전시상황에도 끊김이 없는 통신태세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시 정보의 실시간 전달이 가능해 지휘통제 및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전술스마트폰 운용, 자동안테나 운용 등을 통해 기동 중에도 통신이 가능해졌다.

● 핵심기술개발

핵심기술개발사업은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기술개발 분야를 선정하여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1년 대비 1,350억원 증대한 7,668억원을 편성하였다. 핵심기술개발사업은 △무기체계연계형 △선도형 핵심기술 △선행핵심기술 △미래도전기술 △국제공동기술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무기체계연계형 기술개발은 국방기획관리체계에 따라 단위과제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무기체계 전력화 도입 시기에 맞춰 요구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둘째, 선도형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민간의 우수기술과 산업경쟁력을 국방연구개발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미래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신기술 및 새로운 무기 등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셋째, 선행핵심기술은 무기체계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첨단기술 개발 능력을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국방과학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넷째, 미래도전기기술 사업은 기존의 사업과는 다르게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신산업을 육성·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은 국제기술협력 MOU를 맺은 국가들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비용과 개발 위험도를 줄이고 세계의 우수기술을 활용하여 무기체계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 방위산업 수출지원

방위산업 수출지원사업은 해외 방위산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2021년 대비 119억원 증액한 638억원을 편성했는데, 방위산업 내수시장의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산업 수출지원은 크게 △무기체계 개조개발지원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 △방산수출 진흥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기개발된 무기체계를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 및 운용에 맞게 개조한다. 특히, 우수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축진을 지원하는데, 해당 사업에 지원한 중소·벤처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는 해외시장에서 통하는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지원 △방산물자교역 지원센터지원 △DQ³마크 인증제도 운영 등 다양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산수출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인프라 환경을 구축한다.

방산수출 진흥지원사업은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 국방기술품질원 등 다양한 조직 간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방산수출시장 분석, 유망수출 품목 발굴 등 방위산업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2. 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를 뜻한다.

3. Defense Quality Certification으로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해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는 마크를 의미한다.

2021년 9월 OECD 중간경제전망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1」

OECD는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를 발간하고, 그 중간인 3월과 9월에는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한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을 추가로 발표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9월 21일 발표된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1」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수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uyeon0520@kpf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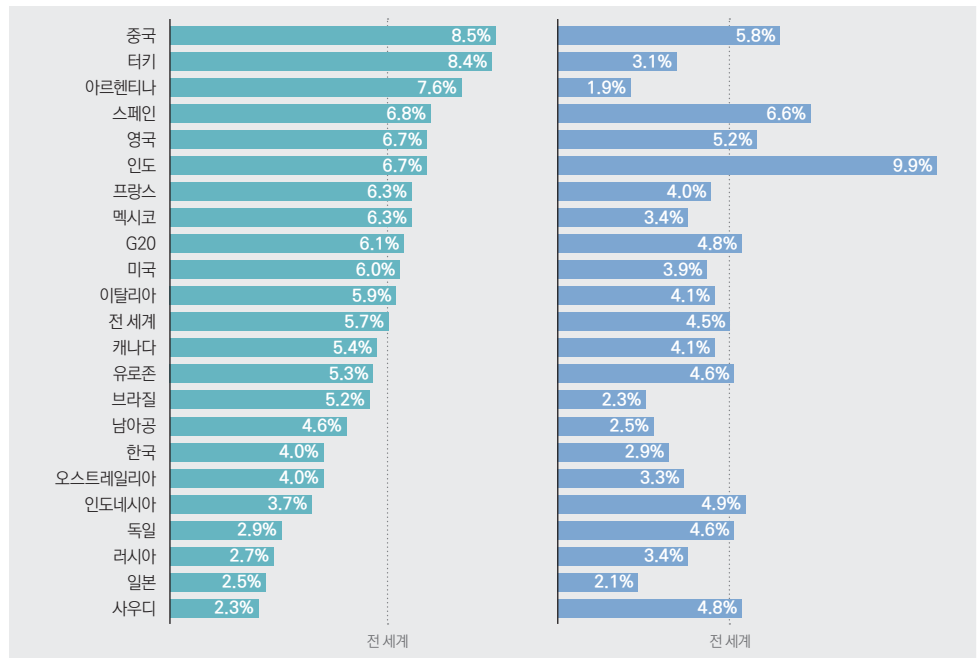
1. 세계경제 전망

OECD는 이번 「중간경제전망 보고서(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에서 세계경제에 대해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회복 모멘텀은 둔화했으며, 그럼에도 회복 궤도를 정상적으로 유지(keeping the recovery on track)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강력한 정책지원 △효과적인 백신 배포 △많은 경제 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2021년 5.7%, 2022년 4.5% 성장¹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유럽의 강력한 반등, 미국의 내년 추가 재정지출, 가계저축의 소비 전환 등이 선진국의 성장 전망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가, 부문, 인구통계학적 그룹에 따라 GDP나 고용 등의 회복세가 매우 불균등(그림 1)하며, 이에 따라 국가별로 각각 다른 정책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같이 생산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이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고용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생산량과 총 근로시간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몇몇 신흥국은 빠른 반등이 있었지만, 일부는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반등에 동반됐다.

〈그림 1〉 2021년과 2022년 실질 GDP 성장 전망



자료: OECD. (2021).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1」, (<http://www.oecd.org/economic-outlook>)

¹ 지난 5월 전망 대비 2021년 0.1%p 감소, 2022년 0.1%p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2021년 2분기에는 서비스 부문의 강력한 지출과 거시 경제정책지원에 힘입어 봉쇄조치가 크게 완화되었거나 감염률이 낮은 국가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감염 발생이 여전하며, 특히 신흥·개도국에서 국가 간 예방 접종 속도와 정책지원 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델타 변이는 지금까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영향이 미미했다. 그러나 회복 기대감에 부담을 주고 단기적 성장 모멘텀을 제약하고 있다.

2. 지역별 전망: 불균등한 글로벌 회복세 계속될 것

OECD는 세계경제 회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고르지 않다고 보았다. 전 세계적으로 접종 속도의 차이가 큰데다, 거시적 경제정책지원의 규모와 접촉 집약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능력도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국경 간 이동에 대한 일부 표적 제한이 계속 필요하고, 델타 변이로 인해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은 봉쇄조치가 재시행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완전한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델타 변이와 임시적 공급 제약의 영향으로 일부 국가에서 단기 모멘텀이 약화되나, 2021년 하반기 성장의 부족분은 2022년 더 빠른 회복을 통해 메워질 전망이다.

● 선진국

거시경제정책의 강력한 지원과 완화적인 금융 여건은 선진국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차세대 EU 기금으로 유럽에 대한 더 높은 투자 지출과 내년 미국의 인프라지출 추가 증가가 내년 회복을 돕는 주요 요소이다. 고갈된 재고 수준의 재건, 자신감 회복, 노동시장 상황의 개선, 가계 저축률의 하락도 내년 수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 한국, 호주에서도 감염이 감소하고 제한이 해제되면서 성장이 회복될 전망이다.

● 한국

한편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지난 5월 전망에 비해 0.2%p 상향조정한 4.0% 성장을 예상했다. 빠르고 강한 회복세에 더해서, 올 1분기와 2분기 모두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높게 나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OECD, IMF, 신용평가기관 등 주요기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모두 4% 이상²이 됐다. 특히 OECD가 한국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것은, OECD가 델타변이 확산 등의 영향으로 세계(-0.1%p), G20(-0.2%p), 미국(-0.9%p), 일본(-0.1%p) 등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차별화가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기간의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는 '20+' 2021년 평균 성장률에서 한국은 G20 내 3위³, 선진국 중에서는 1위가 됐다. 지난해 역성장을 최소화한데다, 올해 델타변이 확산에도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한국 성장률에 대해서도 OECD는 지난 5월 대비 0.1%p 올린 2.9%를 예상했다.

● 신흥국

신흥시장 경제 전망은 엇갈린다. 중국은 팬데믹 이전의 성장경로에 가까울 전망이며, 상품 수출업체는 높은 수출 가격과 강력한 글로벌 수요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계 실질 소득은 높은 에너지 및 식품 가격에 타격을 받았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많은 국가에서 추가 바이러스 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다. 일부 국가,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정책금리를 올린 국가에서는 실질적인 정책지원에 제한이 따른다. 2022년 말에 팬데믹 이전 경로로 인한 G20 신흥시장 경제의 생산량 부족은 G20 선진국 경제 중간값의 두 배로,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² OECD 4.0%(2021.9), IMF 4.3%(2021.7), 3대 신평사 4.0%, 한국은행 4.0%

³ 중국 5.4% > 터키 5.1% > 한국 1.6% > 미국 1.3% > 인도 1.2%

〈표 1〉 2021년 9월 OECD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p)

전망시점	2020년	2021년 전망			2022년 전망		
		2021년 5월	2021년 9월	조정폭	2021년 5월	2021년 9월	조정폭
전 세계	△3.4	5.8	5.7	△0.1	4.4	4.5	0.1
G20	△3.1	6.3	6.1	△0.2	4.7	4.8	0.1
유로존	△6.5	4.3	5.3	1.0	4.4	4.6	0.2
호주	△2.5	5.1	4.0	△1.1	3.4	3.3	△0.1
캐나다	△5.3	6.1	5.4	△0.7	3.8	4.1	0.3
독일	△4.9	3.3	2.9	△0.4	4.4	4.6	0.2
프랑스	△8.0	5.8	6.3	0.5	4.0	4.0	0.0
이탈리아	△8.9	4.5	5.9	1.4	4.4	4.1	△0.3
스페인	△10.8	5.9	6.8	0.9	6.3	6.6	0.3
일본	△4.6	2.6	2.5	△0.1	2.0	2.1	0.1
한국	△0.9	3.8	4.0	0.2	2.8	2.9	0.1
멕시코	△8.3	5.0	6.3	1.3	3.2	3.4	0.2
터키	1.8	5.7	8.4	2.7	3.4	3.1	△0.3
영국	△9.8	7.2	6.7	△0.5	5.5	5.2	△0.3
미국	△3.4	6.9	6.0	△0.9	3.6	3.9	0.3
아르헨티나	△9.9	6.1	7.6	1.5	1.8	1.9	0.1
브라질	△4.4	3.7	5.2	1.5	2.5	2.3	△0.2
중국	2.3	8.5	8.5	0.0	5.8	5.8	0.0
인도	△7.3	9.9	9.7	△0.2	8.2	7.9	△0.3
인도네시아	△2.1	4.7	3.7	△1.0	5.1	4.9	△0.2
러시아	△2.5	3.5	2.7	△0.8	2.8	3.4	0.6
사우디	△4.1	2.8	2.3	△0.5	3.8	4.8	1.0
남아공	△7.0	3.8	4.6	0.8	2.5	2.5	0.0

자료: OECD. (2021).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1」,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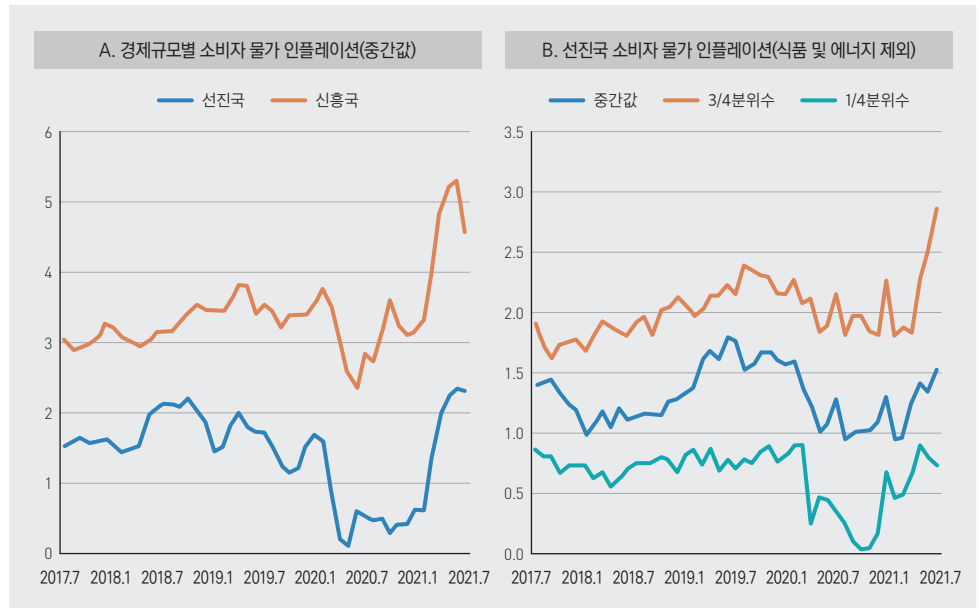
3. 주요 리스크 요인

● 소비자물가 상승

소비자물가는 최근 몇 달 동안 전 세계적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OECD는 통상적으로 5월과 11월 본전망에서만 내놓던 물가전망을 이번 중간전망에서도 발표했다. OECD는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해 세계경제 전체적으로 올해 물가가 3.7%, 내년에는 3.9%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일부 아시아 국가를 제외하고, 미국·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 전망을 상향조정했다. △높은 상품 가격 △공급 측면의 제약 △경제 재개에 따른 수요 증가 △팬데믹 초기 몇 달간 내려갔던 일부 부문별 가격의 반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연간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 5% 이상 상승했지만 다른 많은 선진국,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2, 패널A). 기본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식품 및 에너지 제외)도 상승했지만 선진국에서는 팬데믹 이전에 관찰된 것과 유사하게 유지된다(그림 2, 패널B). OECD는 다만, 팬데믹 초기 가격 하락분에 대한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공급능력이 점차 안정되면서 물가는 올 4분기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림 2〉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추이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자료: OECD. (2021).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1」, p.9

4. G20 0.2%p, 미국 0.7%p, 영국 1.0%p, 캐나다 1.1%p, 한국 0.4%p

● 잠재적 하방리스크

OECD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면 통화정책 정상화, 즉 테이퍼링의 시작에 대한 금융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일부 신흥시장 경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통화 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고정하고, 금융시장 가격 조정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백신 배포 속도와 기존 백신의 효율성도 주요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더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을 막지 못한다면 더욱 엄격한 봉쇄조치가 시행될 수 있으며, 민간 부문의 지출이 위축되어 일부 자본이 폐기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2022년에 3%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G20 인플레이션도 3% 미만으로 하락하고 실업률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4. 권고사항: 완전하고 지속적인 회복을 위한 노력

OECD는 완전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생명을 구하고 소득을 보존하며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전 세계에 가능한 한 빨리 백신을 배포해야 한다. 저소득 국가에 자체 및 전 세계적 이익을 위해 백신 접종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려는 강력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백신 공급과 백신 배포에 대한 국내 물류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이 포함된다. 지식, 의료 및 재정 자원을 공유하고 유해한 무역 금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다자간 조치도 필요하다.

● 경제정책

단기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노동시장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한, 거시적 경제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적절한 지원을 보장하는 중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한 예상 경로와 향후 정책 변경 순서에 대해 정책입안자들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회복이 잘 진행되고 백신 접종이 거의 완료된 국가에서는 비상 정책지원보다는 중기 목표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회복이 덜 진행되고 봉쇄조치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접촉 집약적인 부문의 근로자와 기업의 수요와 소득지원에 타기팅된 정책이 필요하다.

●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중기 정책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진전 징후가 명백하게 나타날 때까지 명확한 지침하에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경우 자산 구매를 늦추는 움직임과 정책 금리의 초기 인상이 금리의 미래 변화 시기에 대한 기대치를 변경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상당한 재평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금리는 한국을 제외하고 변경되지 않았으며, 많은 중앙은행은 현재 구매 속도가 둔화하고 있는 경우에 자산 구매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통화 부양책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일시적인 생산 능력 압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은 기본 가격 변동이 억제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잘 고정되어 있다면 계속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 정상화를 향한 최종 움직임의 계획된 시기 및 순서에 대한 지침과 함께 인플레이션의 초과가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는 재정상황,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개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의 징후 및 재정정책이 제공하는 지원에 따라 잘 전달되어야 한다.

● 재정정책

재정정책지원은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미국과 유로 지역을 포함해 올해 시행되는 강력한 재정 부양책은 수요를 지원하고, 소득을 보존하며, 의료 및 예방 접종에 대한 충분한 지출을 보장함으로써 경제회복에 추진력을 제공한다. 특히 단기적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정책지원의 성급하고 갑작스러운 철회는 피해야 한다. 2022년 재정지출의 조절은 경제가 강화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 관련 지출을 줄이는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높은 적자와 증가하는 부채 수준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통화정책이 제공하는 여유 공간 덕분에 부채 상환 부담은 여전히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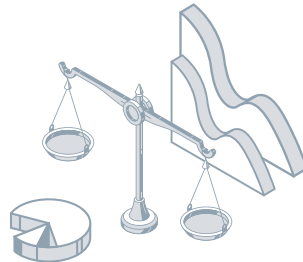
또한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정책의 초점은 건강, 디지털 및 저탄소 기반 시설에 대한 추가 공공투자자와 조세 구성의 변경을 포함해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성장의 전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점차 옮겨가야 한다. 부채를 관리하는 정책 조치는 회복이 잘 진행되고 노동시장 상황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간 후에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향한 중기적 경로와 그 경로에 따른 가능한 정책 변화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재정프레임워크는 신뢰를 유지하고 예산 선택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재정 상황은 신흥개도국 사이에 상당히 다르지만 많은 국가가 △소득지원 △백신 배포를 위한 적절한 자원 제공 △부채관리의 지속 가능성 보장 사이에서 어려운 절충에 직면해있다. △강력한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된 수입 징수 △건강 및 사회적 우선순위에 대한 지출 등은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고 전염병 관련 빈곤 급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백신 접종에 대한 국제적 지원 강화와 글로벌 안전망 강화도 경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것이다.



1990년대 작은 정부론: 민주화와 외환위기

글.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dsoak@naver.com)



1980년대에 이룩한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은 우리 경제 내에서 민간부문의 비중과 역할을 크게 성장시켰다. 이는 경제정책의 운용과정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했는데, 민간부문의 자본동원 능력이 크게 개선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기가 점차 어려워진 것이다¹.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요구가 이어져 1987년에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개정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폐지되는 등 대통령의 대 국회 권한이 축소되며 더 이상 행정부 우위의 정책추진도 어렵게 됐다². 이제는 국정운영이 권력을 장악한 소수의 정치집단이 아니라 선거 결과를 좌우하게 될 일반 국민들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제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작은 정부와 경제기획원 해체 요구

16년 만에 부활한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분출된 욕구들을 수용하는데 급급했다. 그간 독재정권하에서 억눌렸던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하면서 1986년 276건에 불과하던 노사분규는 1987년 3,749건으로 급증했고 그 형태 또한 폭력적으로 변모했다³. 정부예산도 점차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면서 정치권의 주도에 의하여 농어촌부채 탕감,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 지역개발 대형국책사업, 농어촌의료보험, 최저임금제, 복지확대 등이 채택됐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이익을 위한 재정운용이 점차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¹ 강광하·이영훈·최상오. (2008).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 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 pp.227-228.

² 1987년까지는 행정부가 제안한 경제제도 및 정책형성에 관한 법안 또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본질적으로 수정되거나 파기되지는 않았다. 여당이라고 할지라도 주요 경제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 최동규. (1991). 「성장시대의 정부: 한강의 기적 이끈 관료조직의 역할」, p.143.

³ 최동규. (1991). 앞의 책, p.156.

물론 초기에는 행정부 재정당국과 정치권 사이에 갈등과 균열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88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무분별하게 남발하자 당시 예산실장은 정부와 여당 예결위원 간담회에서 공약은 예산에 담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여당 정치인들이 일제히 이를 성토했다. 예산실장은 결국 사임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이후 그는 장관급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승진했다. 예산실장의 국고수호 기능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이었다.⁴

정치적인 예산요구는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사회 전반에는 작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이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이는 정부의 역할을 줄임으로써 자유화, 분권화, 개방화를 통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 확장재정을 지지하던 케인스 경제학과 복지국가론이 퇴조하고, 1990년대 초반에는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붕괴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특히 붓물처럼 터지던 민주화 요구가 정부에 대항하는 형태를 띠었기에, 신자유주의가 주창하던 ‘작은 정부론’은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1980년대의 과감한 재정긴축이 있었기에, 당시 우리나라의 작은 정부론은 재정개혁보다 정부조직의 축소, 정부규제의 철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특히 정부주도의 산업진흥을 시장자율적 조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제기획원의 기능이 약화 또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⁵ 그러나 노태우 정부는 경제부처들의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경제기획원의 개편을 추진하지는 못했다. 다만 경제기획원의 공정거래업무를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여, 강력한 기업통제에 근거했던 물가안정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고자 했다.⁶

경제기획원은 1994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재무부와 전격 통합되면서 재정경제원으로 재출범했다. 정부주도의 계획기능을 축소하고 각 부처에 정책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강력한 두 부처의 통합을 통해 이들의 권한을 축소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조정, 예산과 조세의 재정정책, 그리고 금융정책을 하나의 거대 정부부처에 통합하면서 이를 견제하는 기능이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통합 이전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설계하던 경제기획원, 금융산업 진흥을 도모하던 재무부, 그리고 통화금융의 거시적 안정성을 추구하던 한국은행이 삼각 구도를 형성하며 상호 견제 속에서 거시경제를 관리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하면서 이러한 견제의 원리가 작동할 수 없게 된 것이다.

4. 재경회·예우회 엮음. (2011). 「한국의 재정 60년」, p.155. 참조.

5. 이런 입장에서 경제기획원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이만희. (1993). 「EPB는 기적을 낳았는가: 한국 산업정책의 이상과 현실」, 참조.

6. 최동규. (1991). 앞의 책, p.173. 당시로서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획기적이었기에 그 충격을 완화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기획원 내에 그대로 소속시켰다. 김영삼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개편됐다.



외환위기와 정부개혁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중심의 자율적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은 기대와 달리 순탄하지 않았다.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금융기관의 단기 해외차입 급증과 부실 누적, 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무역수지는 1990년대 중반부터 계속하여 적자를 기록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외환보유고도 바닥이 났는데, 결국 1997년에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거대 부처로서의 재정경제원이 금융자율화 등 각종 시장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금융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이다.

1998년 여야 정권교체로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했다. 부실 재벌기업들의 해체, 금융기관들의 통폐합,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충격적인 조치들을 일거에 밀어붙였다. 특히 1999년에는 관치금융이라는 고질적 병폐를 치유하고자 한국은행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재정경제원의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별도의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했다⁷.

그런데 이 때 공공부문의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이유는 ‘고통분담’에 있었다. 여타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운용에 대한 위기감에서 정부개혁이 시작된 것이 아니

⁷ 1998년 4월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통화정책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자주성이 규정됐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정부 추천위원 수도 줄이고 그 위원장도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한국은행 총재로 변경하면서 통화정책의 결정기구로서 독립성을 보장했다.

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86년에 9.9%에 불과했고 재정규모 역시 17~18%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재정적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개혁이 추진됐던 이유는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금융·기업·노동부문의 개혁으로 민간에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구조조정의 무풍지대가 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오던 ‘정부주도 국가발전 전략’의 성공적 결과물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는 은연중에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퍼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백 명씩 민간기업으로부터 해고되는 상황에 이르자 많은 국민들 사이에는 정부능력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 회의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게 됐다. 즉 전 정부의 이런 실정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개혁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고, 이들 사이에 근본적인 정부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와 합의가 형성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⁸

공공부문에 대한 주된 비판의 지점은 문어발식 조직 확장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었다. 외환위기의 주된 원인이 재벌의 문어발식 차입경영에 있었던 것처럼 정부 역시 이러한 형태의 운영을 계속한다면 언젠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이다⁹. 특히 우리나라 공기업 부문은 정부주도 개발체제 하에서 성장만을 거듭하여, 1980년대부터 과감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온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그 규모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정부는 1999년에 공기업 민영화와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인력·조직감축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당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비중은 공기업 전체에서 기관수로는 42%, 인원수로는 77.3%에 달하여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¹⁰.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정부지출은 급속히 증가했는데, GDP 대비 정부지출은 20% 수준을 넘어섰고 국가채무 역시 18%로 약 2배 증가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외환위기 극복 후에는 정부지출과 국가채무가 다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2000년부터 재정수지는 다시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곧 재정절감을 통해 작은 정부를 이뤄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작은 정부론이 지배하던 1990년대에는 재정적자와 재정흑자가 3~4년 단위로 교차하며 정권별로 재정균형이 대략 유지되고 있었다.

⁸ 기획예산처, (2000). 「정부개혁백서」, p.17.

⁹ 당시의 논의에 대해서는 육동석, (1997). 「한국의 공공부문과 통합재정법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참조.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에야 비로소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업, 정부관리기업, 공직유관단체, 정부산하기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¹⁰ 기획예산처, (2002). 「국민의 정부: 공공개혁백서」, p.91 참조. 모기업 26개 중 11개를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 포항제철, 한국종합화학,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8개는 완전민영화를, 그 나머지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는 구조조정 이후에 민영화를 하기로 했다.

〈표 1〉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일반재정 현황(1988~2002년)

(단위: %, 10억원)

연도	임기 중 대통령	GDP 대비 정부총지출	GDP 대비 재정수지	보전재원 ¹⁾			GDP 대비 국가채무 ²⁾
				총액	한은차입	해외	
1988	노태우	14.9	1.4	△ 1,659	△ 655	△ 715	13.5
1989		16.2	0.2	19	530	△ 604	13.3
1990		17.3	△ 0.6	1,578	0	△ 327	12.8
1991		17.4	△ 1.5	4,021	148	△ 283	12.0
1992		17.0	△ 0.4	1,703	5	△ 311	11.7
1993	김영삼	16.4	0.6	△ 813	205	△ 447	11.0
1994		17.2	0.3	△ 1,384	1	△ 395	9.8
1995		17.3	0.3	△ 1,242	△ 650	△ 357	8.7
1996		18.2	0.1	△ 1,099	△ 204	△ 296	9.9
1997		19.6	△ 1.4	6,959	△ 492	6,962	11.9
1998	김대중	22.4	△ 3.4	18,757	323	5,534	16.0
1999		21.5	△ 2.2	13,065	244	975	18.0
2000		21.0	1.2	△ 6,527	60	△ 415	17.5
2001		20.3	1.5	△ 7,268	0	△ 434	17.7
2002		18.2	3.6	△ 22,666	0	△ 562	17.6

주 1) 보전재원은 재정수지 이외에 기업성 특별회계, 정부관리기금의 금융성기금 수지차를 모두 합한 금액임

2) 1996년부터 지방정부 순채무 포함

자료: 재무부, 「한국의 재정통계」(1994년 이전의 「한국통합재정수지」 명칭임), 각 연도
기획재정부, 「2014~2018 국가채무관리계획」, p.186.

미시적 재정운용의 부각: 예비타당성조사

정부와 공공부문의 개혁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학계는 당시 전 세계를 풍미했던 신공공 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을 적극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정부와 공공부문을 시장친화적인 체제로 구조조정하여 ‘명령과 통제’의 정부행정을 ‘자율과 책임’의 경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인데, 정부업무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했다¹¹. 재정운용의 측면에서는 재정총량의 규율, 전략적 자원배분뿐만 아니라 사업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절한 유인과 정보를 제공하는 미시적 재정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¹².

11 공기업의 민영화 외에도 민간위탁, 성과주의 예산, 시장성테스트(Market Testing), 원가계산, 책임운영기관(Agencification), 행정기구의 법인화(Corporatization), 바우처(Voucher) 제도, 고객현장제 등이 있다.

12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정부역할의 변화에 대해서는 World Bank. (1997). The State in a Changing World, World Development Report 1997 참조. 그리고 재정관리의 개혁에 대해서는 Schick, Allen. (1998). A Contemporary Approach to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The World Bank(번역본: 옥동석. (2020). 「현대적 공공지출관리: 예산편성 및 분석 방법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1999년에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98년 예산당국은 공공사업들에 대하여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타당성조사를 전면 조사했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았는데, 사업을 주도하는 정부부처가 수행한 총 44건의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사례가 오직 1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공공사업의 효율성 목표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압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예산당국은 -당시에는 기획예산처- 중앙집중식으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라는 이유로 예산실이 주도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했다¹³.

<표 2> 1994~1998년 중 타당성조사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건수	예산액	조사결과		조사 중
			타당성 있음	타당성 없음	
건설교통부	15	12,829	9	1	5
철도청	6	730	6	0	0
농림부	1	102	1	0	0
해양수산부	16	12,770	14	0	2
문화관광부	5	930	1	0	3
환경부	1	405	1	0	0
과학기술부	1	600	0	0	1
합계	44	28,366	32	1	11

주: '타당성 없음'으로 조사된 단 1건은 1997~1998년 시행된 '울릉공항 타당성 조사'였음

자료: 기획예산위원회, (1998.9.22.),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 보도자료

예비타당성조사는 미시적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전통적으로 예산당국은 개별 예산사업의 비목을 중심으로 예산관리를 해 왔는데, 예비타당성조사는 사회경제적 효과와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970년에도 「투자사업심사편람」이 발간됐으나 당시에는 외자유치사업을 대상으로 시장성, 수익성 등의 간단한 평가가 이루어졌을 뿐 사회후생적 관점의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¹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재정통계들에 대한 요구가 한층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됐다.

¹³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뿐만 아니라 타당성조사의 방법론과 지침 개발을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KI) 내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2001년에 설립했다.

¹⁴ 경제기획원 훈령 제52호, (1970.8.20), 경제기획원, (1970.10), 「투자사업심사편람」, 이충길, (1971.6), "투자사업 심사제도와 그 요령", 「감사월보」 pp.68~75 참조.

‘창조적 파괴’를 실천한 길거리 화가 뱅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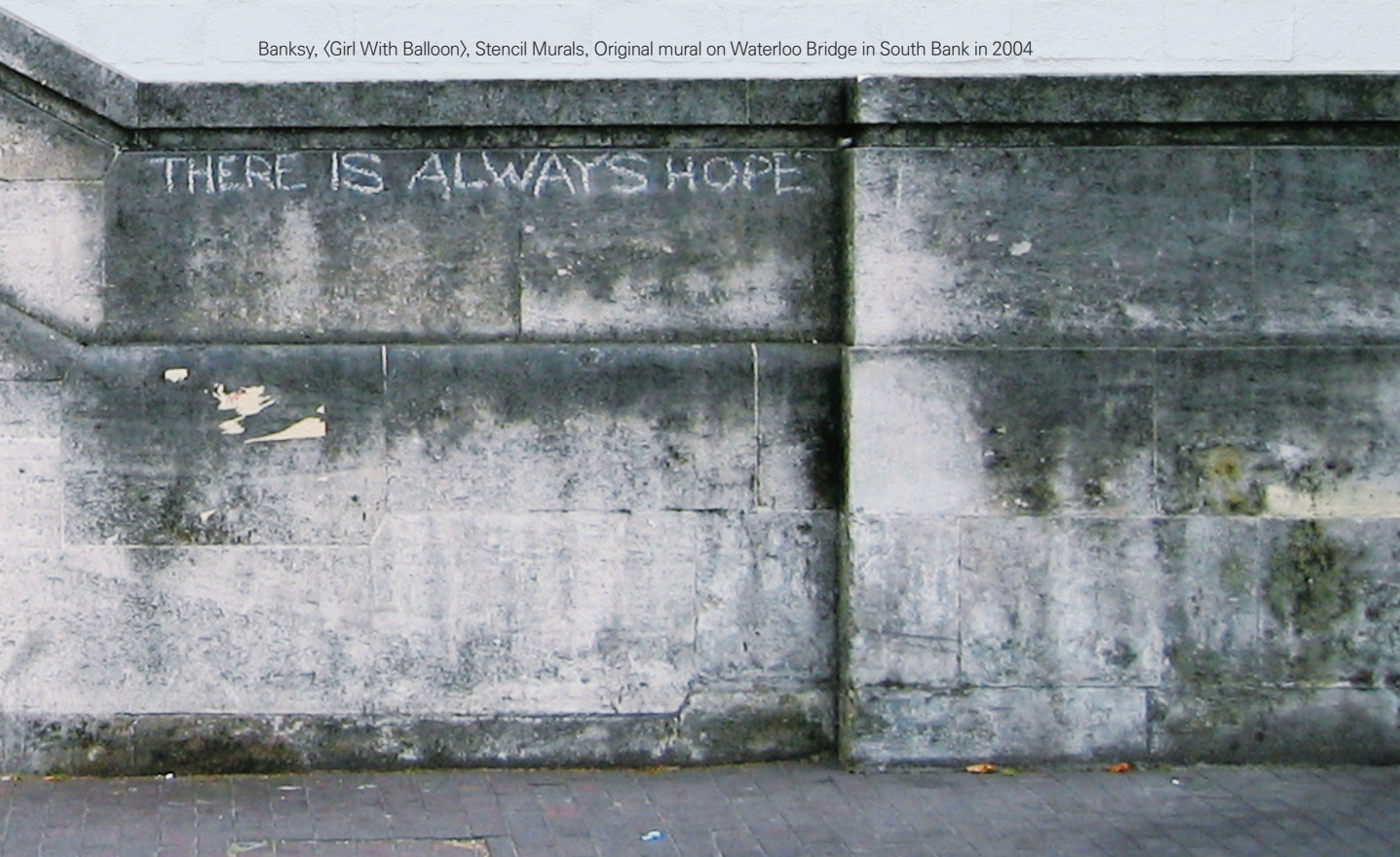
글. 최병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경제학자의 미술관』 저자



2018년 10월 5일, 런던 소더비 경매장. 현대미술 경매에 나온 작품 한 점이 104만 2천파운드(약 15억 4천만원)에 낙찰된 순간 작품이 순식간에 갈기갈기 찢어져 파손됐다. 그 작품은 길거리 화가로 잘 알려진 뱅크시(Banksy)의 작품 <풍선과 소녀(Girl With Balloon)>였고 그의 작품 중 최고가를 기록하는 순간이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작가 뱅크시는 작품을 만들 때 미리 그림 액자에 분쇄기를 설치해 두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낙찰되는 순간 리모컨을 이용해서 그 작품을 파쇄해버린 것이다. 소더비 운영진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과연 낙찰 받은 사람이 이미 파손되어버린 작품에 대하여 어떤 선택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경매 규정상 구매자는 구입을 철회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전화로 참여한 이 낙찰자는 정해진 낙찰 금액에 찢겨진 그림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여성으로 알려진 낙찰자는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예술 역사의 한 조각을 갖기로 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예술작품은 작품 자체가 훼손됐는데도 그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술작품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는 것인가? 일반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는 훼손되거나 파손됐다면 당연히 경제적 가치가 소멸되어 가격은 폭락하거나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령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사람이 그 자동차 엔진이 불량이거나 파손된 것을 발견한다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하거나 다른 새 차로 바꿔달라고 할 것이다. 일반 시장에서 제품의 가격은 바로 상품 가치를 반영한다. 그러나 예술품의 경우는 가격이 작품의 가치를 곧바로 반영하기 어렵다.

Banksy, <Girl With Balloon>, Stencil Murals, Original mural on Waterloo Bridge in South Bank in 2004





Banksy, <Love is in the Bin>, 2018, Aerosol Paint, Acrylic Paint, Canvas, Board, 101x78cm, Staatsgalerie, Stuttgart

문화경제학자인 존 러스킨(John Ruskin)의 가치론은 이런 경우에 유용하게 적용된다. 그에 의하면 예술 재화는 보통의 일반 소비재와는 달리 소비로부터 얻어지는 사용가치(Use Value) 이외에 본원적인 가치(Intrinsic Value)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는 그런 점에서 시장에서의 교환가치 보다는 본원적인 고유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문제는 본원적 가치는 객관적으로 쉽게 측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더라도 시장에서 유통될 때 그 가치가 화폐적 가치로 환원되어 통용되기가 쉽지 않다. 즉 그것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예술품의 본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화폐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뱅크시 작품의 낙찰자는 바로 이러한 예술품의 속성을 이해하고 가치를 부여한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뱅크시는 흔히 ‘얼굴 없는 거리의 화가’ 혹은 ‘게릴라 예술가’로 알려져 있다. 본인은 스스로를 ‘예술 테러리스트’라고 자칭하고 있는 그의 본명은 로버트 뱅크스(Robert Banks)인 영국 브리스톨 출신의 거리화가다. 그는 1990년대 즈음부터 브리스톨을 중심으로 거리 곳곳에 그림을 그렸다. 뱅크시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은 ‘주소가 있는 그림’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가 거리에 그린 그림에는 반드시 번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독특한 ‘민주적인’ 예술 철학을 가지고 있다. 뱅크시는 이렇게 주장한다. “미술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동네의 좋은 ‘벽’(wall)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입장료를 낼 필요도 없다.” 따라서 뱅크시 그림의 가치 또는 시장가격은 그동안 미술 시장이나 미술 경매에서 매겨질 수 없었고 그의 작품의 진정한 가치는 길거리 사람들에게서 그 값어치가 매겨진다는 사실이 다른 화가들의 작품을 평가할 때와는 다른 특이한 점이다. 뱅크시는 2005년부터 런던의 대영박물관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자신의 작품을 몰래 걸어 두는, 일명 도둑 전시를 감행했다. 그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과 런던 테이트 갤러리에 몰래 작품을 걸어놓고 나왔으며, 대영박물관에는 원시인이 카트를 밀고 있는 벽화 그림을 도둑 전시했는데 8일간이나 전시됐음에도 박물관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영국 정부에서는 그의 거리 예술 활동을 인정하고 작가로 받아들임으로써 브리스톨 현지의 벽에 그려진 작품들은 실제로 관리를 받고 있으며 작품 투어나 관광지의 상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진작가인 마틴 볼의 <아트 테러리스트 뱅크시, 그래피티로 세상에 저항하다>라는 책은 그의 예술세계를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어준다. 그의 대표작들인 우산을 쓴 쥐,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여인, 코를 킁킁대는 경찰관과 흰 선, 카펫 아래를 쓸고 있는 호스턴 모텔의 청소부 등 뱅크시가 불합리한 세상에 외치는 작품 100여 점이 수록됐고, 이 작품들은 그가 세상에 전하는 불편한 진실인 것이다.

뱅크시는 경매장에서 자신의 작품을 파쇄한 행위에 대해서 피카소의 말을 빌려 이렇게 옹호했다. “파괴하려는 충동 또한 창조적인 충동이다(The urge to destroy is also a creative urge)”라고. 즉, 파괴 행위는 또 다른 창조를 낳는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발전사를 쓴 슈페터(Joseph Schumpeter)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윤율이 하락하고 새로운 이윤창출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경제발전에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기존의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타파하고 새롭게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고, 이것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뱅크시는 이러한 기업가정신에 투철한 예술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매에 나왔던 작품 <풍선과 소녀(Girl With Balloon)>는 파쇄된 이후, 새로운 작품명을 얻어 <쓰레기통 속의 사랑(Love is in the Bin)>이라고 명명됐다. 소더비 경매의 현대미술 책임자는 이 작품에 대해서 “경매 도중 창조된 역사상 첫 예술품”이라고 가치를 부여했다. 뱅크시는 낙서쯤으로 취급받던 벽화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권력과 제도를 그림으로 풍자하는 거리의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이제는 ‘살아있는 전설’이 됐다.

오스트리안 학파의 창시자,

칼 멩거

글.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현재 자유주의연구회 회장

Carl Menger

칼 멩거 1840~1921





물가를 조사할 때마다 밀값이나 아연값, 심지어 건축물값도 노동투입량과 전혀 관계없이 변동한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몹시 당황했던 인물이 있었다. 바로 오스트리아 정부의 홍보실에서 물가·고용과 경기변동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청년, 칼 멩거(Carl Menger, 1840~1921년)였다. 상품가격은 노동투입량, 즉 생산비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믿음(노동가치론, 비용가격론),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칼 마르크스 등 쟁쟁한 인물들도 벗어나지 못했던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상품가치는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좌우된다

수많은 고민 끝에 멩거는 상품가격 형성의 최종 원천이 그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주관적' 가치 평가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화의 가치

는 그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그 재화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관주의'를 잘만 개발하면 경제 현상을 멋지게 설명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자, 그는 다니던 직장을 접고 경제학 연구에 매진했다.

멩거가 개발한 주관주의는 상품의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 화폐, 법 등, 경제현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개인행동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 현상은 개인들의 행동결과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 환경에 대한 그들 각자의 인식결과, 즉 지식이다. 흥미롭게도 그 지식은 그들 각자에게 고유하다는 의미에서 주관적이다. 따라서 가격 수준의 변동은 개인의 주관적인 행동의 결과라는 것이 멩거의 설명이다.

빵값이 비싼 것은 빵 생산을 위한 노동량이 증가했거나 밀가루값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빵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라

고 멩거는 주장한다. 생산요소들의 가치는 그들의 생산적 기여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평가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그의 주장도 혁명적이다. 생산비용이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이 생산비용을 좌우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납품 가격은 부품을 조립하여 만든 제품 가격에 달려있기에 원자재 가격 인상이 납품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소비자가 인상된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만이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이를 다루는 경제학은 자연과학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 멩거의 입장이다. 그래서 자연과학을 모방한 계량·수리 경제학을 믿지 말라고 주장한다. 그가 총공급, 총수요 등, 총합변수와 거시경제학을 반대하는 것도 그것이 경제주체들의 주관성에 기인한 이질성과 다양성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화폐, 법 등 유용한 제도는 인위적이 아닌 자생적인 것

인간은 시간 속에 존재하므로 그는 자신의 외부 세계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안다고 해도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장이 필요한데, 이것이 시장이라는 멩거의 인식도 혁명적이다. 완전히 아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시장이 불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런 학습 과정 때문에 시장은 역동적 과정이지 정태적 균형이 아니라는 게 현실에 매우 적합한 그의 설명이다.

멩거의 혁명적 인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자생적 질서'의 발견이다. 시장가격과 시장현상은 통치자가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행동으로부터 의도치 않게,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결과라

멩거가 개발한 주관주의는 상품의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 화폐, 법 등, 경제현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개인행동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 현상은 개인들의 행동결과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 환경에 대한 그들 각자의 인식결과, 즉 지식이다.



는 얘기다. 화폐의 기원에 관한 멩거의 역사 인식도 흥미롭다. 원래 화폐도 통치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상품거래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심지어 법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영국의 보통법처럼, 자생적으로 형성된다는 멩거의 설명도 소중하다.

자생적 질서 개념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와 제도를 바꿀 수 없다는, 그래서 정부개입은 억제해야 한다는 자유 사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멩거는 주관주의를 기초로 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아주 새로운 경제학적 인식체계, 즉 오스트리안 학파의 초석을 닦았다.

멩거의 사상이 등장하던 1860년대 중반까지 오스트리아는 자유무역이 번창했고 시민들은 언론·사상·학문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비엔나의 카페들은 온통 정치적 학문적 토론의 장이었다. 수많은 학자, 지식인이 비엔나로 몰려들었다. 지적 풍토에서 새로운 사유방식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왕성했다. 이런 배경에서 멩거는 경제학의 ‘진정한 혁명’을 일으켰다.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행동 동기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인간의 인지도 주관적이라고 보고 시장이론과 시장철학을 개발했다.

멩거 사상의 힘

멩거의 강의는 유명했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심지어 미국 학생들도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비엔나로 몰려왔다. 19세기 말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노동문제로 사회주의 운동이 강력



해지고 비스마르크의 집권으로 보호무역과 경제 간섭, 복지정책으로 경제 자유는 점차 줄어들었다. 멩거는 정부 간섭을 줄여야 한다고 설파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주목받지 못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유럽 사회의 좌경화가 깊어지자 멩거의 추종자들이 등장했다. 미제스와 하이에크가 오스트리안 학파를 이끌면서 그의 사상체계를 확대 발전시켰다. 1980년대에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이 케인스가 망쳐놓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멩거가 개척한 오스트리안 학파를 소환했다.

오늘날에도 모든 형태의 간섭주의에 대항할 자유주의 지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도맡고 있는 것이 자유주의의 오랜 전통을 가진 영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자유주의 정치사가 짧은 오스트리아에서 형성된 학파라는 것은 흥미롭다.



Publisher Letter

재정데이터 읽는 힘이 사회적 자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이달 초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에 취임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우리나라 예산편성·집행·결산을 처리하는 디브레인 (dBrain) 시스템, 국고보조금을 통합관리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 나라살림 현황을 공개하는 플랫폼 <열린재정> 등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아울러 재정정보원장은 재정월간지 <나라재정>의 발행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라재정> 독자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독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사회는 국방, 치안, 교육, 도로, 복지, 감염병 대응 등 국민의 일상 대부분이 재정에 의해 작동됩니다.

재정은 국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고, 경제성장의 재정 의존도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도 각국은 재정을, 축구로 치면 마치 '원톱'처럼 내 세워 경제위기에 대응했습니다. 재정여력이 부족한 나라는 제대로 손을 쓸 수 없었고, 이는 지금 목격하는 경제회복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이 코로나19 위기의 승자와 패자를 가른 셈입니다.

더 나아가 재정은 우리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결정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한 질문이 "우린 언제 선진국이 될까?"였다면, 지금은 "어떤 선진국이 될 것인가?"로 바뀌었고, 그 대답 중 하나는 '재정이 탄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하지만, 국민들께 재정은 여전히 “나랑 관계없는 어려운 분야”로 치부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초중고를 통틀어 재정교육이 사실상 전무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나라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사회는 재정데이터를 읽고 이해하는 힘이 달립니다. 또한 세입기반 약화, 연금고갈, 국가부채,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등 수많은 재정담론이 분출하지만, 그때마다 정치적 이슈로 반짝 소비될 뿐 균형 있는 논의와 반듯한 대안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 국회에 낸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세입기반 확충, 지출효율화, 사회보험재정 안정화, 재정위험 관리 등의 재정과제가 담겼습니다.

모두 시급한 숙제지만, ‘남이 대신해줄 수 없는’ 숙제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월간 <나라재정>의 역할과 쓸모를 봅니다.

재정데이터를 읽는 힘, 재정담론을 소화하는 능력이야말로 사회적 자본이고, <나라재정>은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나라의 살림살이 정보를 국민께 소상하게 알리는 재정정보 도우미도 되고, 재정을 둘러싼 여러 담론을 쉽게 소개하는 광장 역할도 수행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재정주인의식과 재정균형감이 커질 것이고, 이에 비례해 재정효율성과 지속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국내 유일 재정전문 대중지’를 표방하며 창간한 <나라재정>이 연말이면 창간 5년, 통권 60호를 맞습니다.

통권 100호, 1000호까지 이어지도록 꼼꼼하고 깐깐한 독자가 되어주십시오.

사회적 자산이 축적·확산돼 ‘재정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그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재정데이터를 읽는 힘, 재정담론을 소화하는 능력이야말로 사회적 자본이고, <나라재정>은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Financial *Calendar*

2021

10月

October

● 국제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January

재정

- 2022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경제

- 통계청 2020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 한국은행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국내총생산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IMF 수정세계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February

재정

- 2020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0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경제

- 통계청 202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 발표

March

재정

- 2022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제

- 한국은행 2020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July

재정

-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제

- 통계청 2021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국제

- IMF 수정세계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August

재정

- 2022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 2022년 예산안 제출(정부 → 국회)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통계청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September

경제

- 한국은행 2021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 ADB 2021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수정 (Asian Development Outlook Update) 발표

□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정부, 8.31.)

-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회복', 회복의 온기를 나누는 '상생', 경제·사회의 한 단계 '도약'을 견인하기 위한 「2022년 예산안」을 마련. 내년 예산안은 ①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②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③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④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투자중점으로 구성됨
- 2021~2025년 재정 운용방향은 ① 포용적 경제회복과 경제·사회 전환, 인구총격 대응 위한 재정 역할 지속 ② 총량관리 강화 및 선제적 위험대응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③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의 효과성·민주성 제고 등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OECD, 9.21.)

- OECD는 2021년 9월 중간경제전망에서 최근 델타변이 확산 영향을 감안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전 세계·G20 등 전반적인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 반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5월 전망 대비 0.2%p 상향한 4.0%로 전망하며 선진국 중 우리나라와 프랑스·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국가만 성장전망을 상향 조정
- 향후 정책 방향으로 ① 백신보급을 위한 국제적 협력 ② 적극적 거시정책 지속 ③ 구조개혁 등 권고

April

04

May

05

June

06

재정

- 2020년 결산검사 의뢰(기획재정부→감사원)

경제

- 통계청 2020년 가계동향조사(연간 지출) 결과 발표
- 한국은행 2021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국제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 ADB 2021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발표

재정

- 2022년 예산요구서 제출(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2020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20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2021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경제

- 통계청 2020년 가계동향조사(지출 부문) 결과 발표
- 통계청 20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1년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기획재정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October

10

November

11

December

12

국제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재정

- 2022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경제

- 통계청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발표

재정

- 2022년 예산 확정

경제

- 기획재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2021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①

한국재정정보원, 박용주 제3대 원장 취임

기획재정부는 10월 6일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에 박용주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박용주 신임 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국장, 경제분석실 실장 등을 역임한 재정 전문가이다. 또한 지난 5년간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장(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해오며 재정정보분석의 기초가 되는 재정통계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개도국에 재정개혁 사례를 전수하는 등 재정분야 발전에도 기여했다. 박용주 원장은 “국가재정시스템 운영 패러다임이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을 디지털 재정전문기관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하며, “△미래비전 설정 △고객기능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②

한국재정정보원,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에서 사회공헌상 수상

한국재정정보원은 10월 5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 ‘2021년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에서 사회공헌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실패박람회에서는 실패사례 공유를 통해 재도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 실패극복사례의 응모주제에는 코로나19 전염병 예방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등이 추가됐는데, 한국재정정보원은 「K-방역의 숨은 주역은 디브레인 운영」이라는 사례명으로 이 부문에 응모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올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사례를 학술적으로 저명한 SSCI급 국제저널 『Public Money & Management』에도 등재(2021.5.)한 바 있다. 이 논문은 ① 재정확대 과정에서 dBrain 역할, ② 코로나19 시대 dBrain의 업무연속성(BCP) 확보방법, ③ 한국재정정보원의 코로나19 대응사례에 대한 WB·IDB와의 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

한국재정정보원, 공공기관 최초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手語) 영상 교육자료 제작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보조사업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언어적 선택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전산시스템 교육자료를 「한국 수어」와 「한글식 수어」 방식으로 동시에 제작한 'e나라도움 수어(手語) 영상'을 배포한다. 한국재정정보원에서는 지난 4월 e나라도움 대구지역사무소에 사용자 교육을 듣기 위해 수어통역사와 함께 방문했던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수어(手語) 교육자료의 필요성을 착안하여, (사)한국농아인협회의 자문을 받아, 농인(聾人) 전문모델 및 e나라도움 전문교육강사가 '수어로 알려주는 알기 쉬운 e나라도움', 'e나라도움 권장수어' 제작을 추진했으며, 공공기관 최초로 두 가지 방식(한국 수어, 한글식 수어)을 동시에 제작했다.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획득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하는 제도로, 기관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이번 ISMS-P 인증을 계기로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높은 정보보호 수준과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데이터 특성에 맞는 시각화 첫걸음

한국재정정보원은, 외부 데이터 전문가의 집합지능을 활용해 국가재정 데이터를 △쉽고 △직관적이고 △데이터별 특성에 맞게 표현하는 Kaggle*방식의 '재정데이터 시각화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0월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 Kaggle'로 불리는 플랫폼 <데이콘>에서 지난 8월 5일~9월 10일 열린 경진대회에는 총 408명의 데이터 전문가가 참여해, 이 중 19팀 51명이 <열린재정> 및 <포털 공공데이터>에 있는 재정데이터를 시각화한 차트 179개와 소스코드를 제출했다.

참가자들은 원, 선, 막대그래프 등이 주로 쓰이던 기존 재정데이터 시각물 대신에 범프(Bump), 덤벨(Dumbbell), 생키(Sankey), 래디얼바(Radial bar) 등 다양한 다이어그램 툴을 접목해 재정데이터를 최대한 쉽고 직관적으로 시각화하려고 노력했다.

정부의 16대 자원배분을 시계열까지 확보한 범프차트(그림 1)로 보여주거나, 자산·부채·순자산을 덤벨형식으로 간단히 표현하거나, 세입이 지출로 바뀌는 흐름을 생키차트

(그림 2)로 표현하는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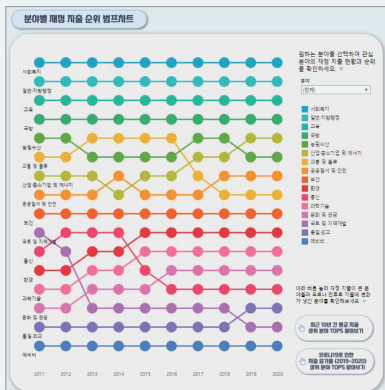
재정정보원은 참가자들의 자체 투표를 통해 1차 심사에서 10팀을 선발하고, 2차 전문가 심사에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 등 5팀을 최종 선정했다.

구분	팀명	제목
최우수	어사즈	사용자 맞춤형 재정데이터 시각화
우수	신박한 주연	대한민국 재정 토크아보기
	재정아~놀자!	누구나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재정EASY~!
장려	칼퇴요정	대한민국의 내일을 부탁드립니다
	팀 따봉	한눈에 쉽게 보는 각 부처 사업별 예산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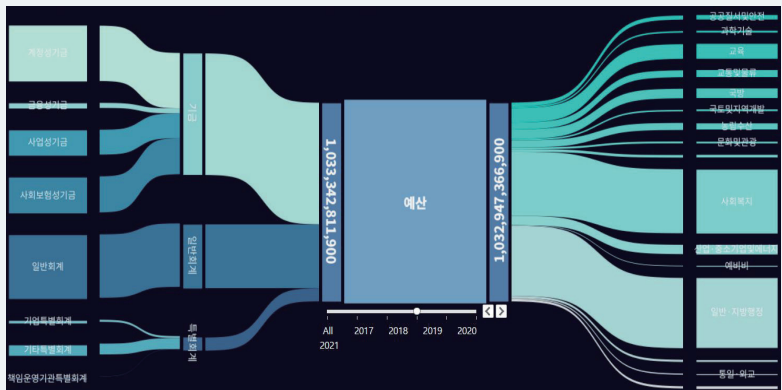
재정정보원은 수상작을 수정·보완해 나라살림 데이터를 국민들께 쉽게 공개하는데 활용하고, 국가 재정정보 공개플랫폼 <열린재정>의 이용자들이 재정데이터를 다양한 시각물 형태로 추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Kaggle: 정부·기업 등이 플랫폼에 △과제 △과제해결에 쓸 데이터 △상금 등을 올리면, 외부 데이터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결하는 '데이터 분석대회 플랫폼'(구글 자회사)

<그림 1> 범프차트



<그림 2> 생키차트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나라살림**,
열린재정에서 확인하세요!

열린재정



열린 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이란?

국가재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공개 시스템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정보 공개

세입/세출, 재무제표, 국유재산, 물품, 채권, 결산보고서 등

열린재정은,
일반 국민을 위한 알기 쉬운 정보,
전문 연구자를 위한 깊이 있는 상세 정보,
내게 맞는 정보를 찾아보는 맞춤형 정보 등
다양한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월간 <나라재정> 정기구독 신청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월간 <나라재정>은 구독 신청 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재정 E-mail을 통해 받아보실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서명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E-mail: narajaejung@kpfis.or.kr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재정> 사진인증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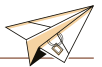
월간 <나라재정>을 즐겁게 읽으셨다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사진과 함께 간단한 느낀 점을 적어 보내주신 분들을 선정하여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인증 및 독자편지 보내주실 곳

이메일 narajaejung@kpfis.or.kr

응모 기간 2021. 10. 29. ~ 11. 14.



지난 호 이벤트 당첨자

dra*****@naver.com
anw*****@hanmail.net
hya*****@nate.com
phj****@hanmail.net
cho*****@hanmail.net
mr*****@naver.com

독자편지

미술엔 문외한이긴 하지만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인문사회, 역사, 가끔은 미술에 관한 책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오~참신한 주제인데?”라는 생각이 젤 먼저 들었어요. <나라재정>이라는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경제 관련 사보에서 이런 재밌는 기사를 읽을 수 있어서 좋네요. 미술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와 연관해서 ‘모델비용’, ‘비용극소화원리’라는 경제용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mr*****

월간 <나라재정>은 개인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narajaejung@kpfis.or.kr로 메일 주세요.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재정정보화를 이끌어갑니다.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